석사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2018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김 경 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litary-First Policy in the Era
of Kim Jong-un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김 경 열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litary-First Policy in the Era
of Kim Jong-un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김 경 열

김경열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김 경 열

현대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3대 세습으로 집권한 김정은은 사상·이념적인 통일과 공포정치,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동북아를 비롯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등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뜨는 대담한 정치플레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상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병영국가이면서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북한이란 특수한 체제에서 김정일의 통치이념이었던 ‘선군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왔고 향후 대내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계승하는 지도자로 부각되었으나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무장한 군부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어 비대하고 비정상적인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군부가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공포통치와 함께 피의 숙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부는 더 이상 김정일 시대 모든 권력집단에 우선하는 ‘선군’이 될 수 없었지만 체제보위와 체제건설 그리고 한반도 적화야욕을 위한 무력집단으로서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은 ‘선당’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선핵’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과 한반도 적화야욕 실현, 그리고 ‘선경’을 통한 경제회생과 주민생활 향상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김정일 보다 뛰어난 내부 장악력과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통해 체제안정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핵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는 대담한 모습을 보면 북한 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지도자로 보인다. 물론 체제생존은 미국의 행동여하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 볼 때 북한 지도층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체제목표 달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과 달리 대외관계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선핵’에 올인하면서 더 큰 파이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일도 하지 못한 대담한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담보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내 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도발과 전쟁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는 ‘선군정치’는 김정은이 언제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박판의 조커와 같은 옵션일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내부결속과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행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김정은의 도발적 성향

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金正은이 미국과 관계악화 상황을 전환할 목적으로 남한을 담보로 한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책상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선군’의 옛 추억을 꺼내어 불을 지피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즉 북한 사회에서 ‘선군’은 체제 불안정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든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옵션인 ‘용군’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와 달리 ‘선군’이 ‘선당’, ‘선핵’, ‘선경’ 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은 군부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독재체제에서 군부가 독재자와 공생하면서 체제수호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지만 독재자로부터 버림받았을 경우 독재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김정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군부의 사상일탈과 체제반감이 더해진다면 독재자에게는 더없이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군사상, 선당, 선경, 선핵, 공포통치, 용군, 유일적영도체계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배경과 목적	1
1.2 연구 범위와 방법	3
II.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5
2.1 조선인민군 창설과 한국전쟁	5
2.2 김일성 1인 독재체제 구축	12
2.3 북한군의 기능	16
2.4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	21
III.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고찰	28
3.1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29
3.2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위상 강화	45
3.3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역할 확대	54
IV. 김정은 시대 통치행태 특징	62
4.1 代를 이은 세습체제 구축	63
4.2 당-군 관계 재설정	67
4.3 군부 공포통치 강화	71
4.4 핵·미사일 개발 주력	77

4.5 용군정치 하 체제결속 차원 현지도	83
V.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 전망	89
5.1 선군정치의 한계	90
5.2 대내외 환경 평가	93
5.3 선군정치 변화 전망	105
VI. 결 론	109
6.1 연구결과 요약	109
6.2 연구의 시사점	112
6.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14
〈참고문헌〉	115
ABSTRACT	125

【 표 목 차 】

[표 3-1] 북한의 경제성장 추이	32
[표 3-2] 국방위원회 구성인원 변화 현황	46
[표 3-3] 군부 엘리트 권력서열 변화	49
[표 4-1] 공개된 김정은의 성격 종합	64
[표 4-2] 김정은 신년사에서 ‘선군’ 언급 횟수	68
[표 4-3] 김정일, 김정은 권력세습 비교	71
[표 4-4] 군부 엘리트 계급 강등·복권 현황	76
[표 4-5] 군부 주요 직위자 교체 현황	76
[표 4-6]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지도 동향	87
[표 4-7] 선군정치 역할과 위상 변화	88
[표 5-1] 북한 재정지출 중 국방비 비중	91
[표 5-2]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93

I.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김정일 사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0년 9월 개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고모인 김경희 등과 함께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2년 김정은은 집권이후 첫해 새해 최초 현지지도를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방문하여 ‘김정일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선전하고 있던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에서 시작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계승자에 대한 기대는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한때 자신의 포병술 스승이나 다름없었던 전 총참모장 이영호를 숙청한 이후 군부와는 일정거리 선을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또한 김정일과는 달리 각종 노동당 대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선당’, ‘김일성-김정일주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등을 쏟아내면서 김정일 시대 ‘선군’과는 확연하게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위원장’ 직위에 올랐으며,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선군정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국가와 유사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김정일 시대 군부 중심 엘리트가 주력이었던 통치세력은 당 중심의 인물들로 교체되었고, 과거 국방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정책 결정과 주요 현안논의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행동규범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39년 만에 개정하며 통치기구인 당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김정일 시대 ‘선군사상’으로 대변되는 병영국가 형태로 경

영되었던 북한이 김정은 집권과 함께 당 중심의 국가운영으로 변화되면서 체제수호와 대남적화통일의 무력수단인 북한군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괘 타격계획’¹⁾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담판대결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채택할 수 있는 ‘선군정치’는 어떤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경제·핵병진 노선이 한층 강화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선당정치’가 ‘선군정치’를 압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김정일의 통치이념이었던 ‘선군정치’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① 북한군의 기능과 역할, ② 김정일 선군정치의 속성과 북한군의 역할과 기능, ③ 김정은 체제하 선군정치가 변화하면서 북한군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에서 ‘괘 타격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미국령 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타격위협을 가하였으나 공개된 상황판의 타격목표인 앤더슨 공군기지는 2011년 촬영된 무료 구글어스 사진²⁾으로 군사대결에 대비한 동원을 하지 않은 가운데 괘포위 사격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 미사일을 활용하여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수사적 위협에 불과한 것으로 김정은의 의도가 전쟁을 지향하는 것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김정은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함께 정권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면 김정은의 전쟁 위협과 달리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쉽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군정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1) 『조선중앙통신』, 2017년 8월 15일.

2) <http://www.sedaily.com/NewsView/1OJSBVLLH8>, “김정은 옆 괘 위성사진, 6년 전 촬영된 것 '실제 타격 준비?' 의문”, (서울경제, 2017.8.17.)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김정은의 선군정치 변화와 북한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예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 범위를 한정시켰다. 먼저, ①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총살시키는 강력한 공포통치로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안정적인 체제운영이 가능하며 외부의 급격한 요인이 없는 한 붕괴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② 북한의 경제 상황은 UN제재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급격한 반전은 없겠지만 중·러의 제한적인 지원 및 교류로 체제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핵·미사일 도발 이후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 경제는 국제교류 다변화로 경제 회복력이 강화되어³⁾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경제난은 더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하 선군정치 표출 형태와 북한군의 위상 변화에 따른 우리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북한에서 발행한 1차 자료와 언론방송 보도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문헌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는 북한에서 간행된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저작집』, 『조선대백과사전』 등이다. 또한 북한 간행물은 아니지만 북한의 실상과 상세한 소식들을 보도하는 『연합뉴스』와 각종 최신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그 외 학술논문 및 학술지 그리고 북한관련 보고서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 논문은 총 6장 20절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북한군의 창설과 김일성의 독재체제 구축, 북한 체제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으로부터 선군정치 하 북한 군부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4장은 본 연구의 핵심 분야

3)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2일, 중국 안방연구소, “북한 경제가 수십 년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과 일정 수준의 내생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연간 경제 성장률이 1~5%로 추정되는데, 4%를 넘기면 유엔제재 시행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갖추게 된다”

인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 연구를 위해 김정은의 통치행태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장까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가 제 4장 김정은의 통치행태의 특성과 결합되어 제 5장 핵심 분야인 김정은의 선군정치로 나타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다. 김정은의 선군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상을 제시하면서 제 6장 결론에서는 김정은 선군정치와 북한군 역할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존 북한에 대한 연구는 체제 외형과 팩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하여 북한자료와 현지지도 등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방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군정치와 김정은 통치행태 그리고 선군정치 변화 전망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연구 자료가 난무하여 자료 활용시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손자의 명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객관적인 이해 없이 우리 기준과 틀을 적용하여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관련 지식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북한과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 일부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였고, 관련 토의 및 세미나 참석과 병행하여 안보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본 논문을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II.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해방 직후 38도선 이북지역은 조만식의 우익민족진영, 박헌영의 좌익 공산주의 진영, 허가이의 소련파, 김두봉 및 무정 등의 중국 연안파 등이 각축을 벌이는 구도였으나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이 소련의 비호 아래 점차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당시에는 각 종파들 간에는 상호 견제와 협력체계가 다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구도는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빌미로 일부 세력들을 숙청하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56년에는 소련파·연안파까지 제거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58년 조선인민군 내 당위원회 설치, 1962년 4대 군사노선 채택 및 당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당·군 일체화를 이루었으며 1967년 갑산파 숙청사건을 통해 당에 대한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1969년 강경 군부파 숙청과 군내 정치위원회 도입으로 군에 대한 당의 통제체계를 완결하면서 군에 대한 유일사상체계 구축이 가속화되었고, 이를 통해 김일성은 절대 권력자로서 확고한 독재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2.1 조선인민군 창설과 한국전쟁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각각 점령되면서 타율적 해방이 이루어졌으며, 상이한 이념과 제도를 지닌 분단구조로 재편되었다.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던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위축된 반면, 소련 군정의 지원을 받던 이북지역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북한지역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함으로써 한반도는 영토적 분단구조에서 이념적 대결구도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⁴⁾

4) 정현수 외, 『북한정치경제론』 (서울: 신영사, 1995), p. 86.

해방 직후 북한 지도층은 공산주의 운동 또는 항일투쟁 경력, 지역적 출신 등을 달리하는 공산주의자 그룹이 파벌을 이루면서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국내파(남로당파),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 극동군의 지휘 하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만주파(빨치산파), 김두봉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연안에서 활동하던 연안파, 소련 국적을 가진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 등이 대표적이었다.⁵⁾

해방 후 1945년 9월 19일 소련군과 함께 원산항에 도착한 김일성은 당시 북한정치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소련군정의 후원을 등에 업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⁶⁾ 하지만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각 정파와 정치적 연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우선 공산주의 세력 내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빨치산 동료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당의 기층조직을 만든 후 노동자·농민·인텔리계층을 망라한 대중정당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청년동맹·직업동맹·여성동맹·농민동맹 등 대중단체들을 조직 혹은 개편하여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갔다.⁷⁾

소련 군정이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에게 군·보안·치안조직 등 무력기구를 장악하도록 지원한 것도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아 당을 장악한 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어서 1948년 2월 8일 김일성은 평양역전에서 조선인민군 창건을 선언하고 창설 기념연설에서 “우리 인민군은 조선인민의 군대”라고 언급하였다.⁸⁾ 정권수립일(1948.9.) 보다 7개월 먼저 군을 창건한 것이었다.⁹⁾ 이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과 함께 남한의 국방부 격인 민족보위성을 설치하였고,

5) 스킨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옮김, 『김일성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 중앙일보, 1994), p. 44.

6) 김창순, 『북한 15년사』 (서울 : 지문각, 1961), p. 43.

7) 서장원,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 구축과 북한의 당·군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26.

8)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 나남, 1996), p. 698.

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p. 104.

1949년 6월에는 남북 노동당을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당과 국가 권력을 장악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남침전쟁을 계획하면서, 1949년 3월과 12월에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하여 스탈린을 설득하였고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선언 이후 1월 30일 소련으로부터 남침전쟁 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일성은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한데 이어 그해 5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모택동 주석을 만나 중국의 참전약속을 얻어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모든 남침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1950년 6월 7일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화전양면전술 카드를 제안하면서 “8월 4~8일 사이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연막작전을 펴더니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40분을 기하여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였다.¹⁰⁾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비상내각회의를 개최하고 전시체제를 선포하였다. 전시체제로의 개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과 국가 및 무력의 전반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행정의 유일 지휘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에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군사위원회’ 설치였다.¹¹⁾ 군사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박헌영·홍명희·김책·최용건·박일우·정춘택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전쟁 동안 김일성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가 국가주권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¹²⁾ 『조선전사』에 의하면, 군사위원회는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 및 군사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었다.¹³⁾

김일성은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남조선의 군대가 6월 25일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다”며 이에 “인민군대

10) 강준만, 『한국 근현대사 산책 1950년대판 1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4), p. 46.

11) 서장원, 전개논문, p. 33.

12) 박영자·정성임 공저, “북한의 중앙국가기관 : 체계와 운영”,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세종연구소, 2007), p. 354.

1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 25권』 (평양: 사회과학원, 1981), pp. 98 - 99.

가 적들을 38선 이북지역에서 격퇴하고 38선 이남지역 10~15km까지 전진하여 용진·연안·개성·백천 등을 해방시켰다”고 보도하였다.¹⁴⁾

한국전쟁은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연맹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유도하였으며, 초기 남북쌍방의 전쟁은 급속히 국제전으로 확장되어 소련의 원조와 중국의 참전은 자유주의와 공산진영 쌍방 간 국제전의 대리전 형태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개전 3일만 인 1950년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였으나 9월 15일 맥아더 장군 주도하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는 급반전되었고 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이어 압록강까지 북상하였다. 북한의 후퇴시기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는 군기와 사상적인 측면이었다. 특히 군의 고위직 간부가 전쟁지도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김일성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조선노동당 정치위원회는 전쟁 중인 1950년 10월 2일 당 부위원장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하여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통해 무너진 군기와 이완된 사상을 바로 잡도록 하였다¹⁵⁾.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0월 21일 정치위원회를 열어 조선인민군 내 당 단체(조직)을 두기로 정식 결정했다.¹⁶⁾

특히 북한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민군의 무질서하고 황망한 후퇴와 당의 명령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여 군대 내 당 단체 창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문화부를 정치부로 확대 개편, 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군대내 당조직 결성’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¹⁷⁾ 소련은 미국을 주도로 한 연합군의 대규모 참전에 따라 전세가 불리해지자 애초 계획에 따라 중국의 참전을 유도하였고,¹⁸⁾ 모택동 주석은 1950년 10월 19일 참전을 결정하였다. 중공군은 1차 전역간 통일된 작전체계가 미확립되어 작전실패를 경험하면서 스탈린에게 지휘부 구성에

14) 김일성, “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1950년 6월 26 일) ; 정일영,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 휴전협상의 지연과 협정체결의 요인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서울: 한울, 2013), p. 18.에서 재인용

15) 서장원, 전개논문, p. 34.

16)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45-146.

17) 김성주, “북한 사회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 63.

18) 안상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80.

대해 문의하였고 스탈린은 11월 17일 전문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50년 12월 3일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 등과 연합사령부 창설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7일에는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던 팡덕회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조-중 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하였다.¹⁹⁾ 북한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경일대까지 후퇴를 거듭하며 전투력이 궤멸된 상태에서 중공군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중국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연합사령부의 편성과 역할, 팡덕회와의 관계, 작전수행 등에 있어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²⁰⁾

1951년 1월 6일 서울이 피탈되었으나 연합군의 재반격으로 같은 해 3월 14일 재탈환하였고,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지루한 공방전 중에 맥아더의 38선 이북으로의 재돌파 논쟁이 벌어지던 중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면서 휴전정책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51년 6월 23일 소련 수석대표 ‘말리크’의 라디오 프로그램 연설을 통한 휴전제안에 대해 미국 또한 같은 해 6월 28일 소련의 협상제의를 수락하는 국무부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²¹⁾

김일성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위원장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전쟁실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쟁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에 벌어진 연안파에 대한 숙청에서부터 본격화되어 소련파와 남로당파에 대한 숙청으로 확대되었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서 연안파 무정을 숙청하였고, 이어 1951년 11월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소련파 허가이를, 1952년 12월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남로당파 박헌영을 각각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숙청하였다.²²⁾

이와 같이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적 대항마들을 점진적으로 숙청하면서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와 개인독재체제를 구축했으며 급기야는 가공할 개인

19) 이정곤, “중국의 한국전쟁 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 137 - 138.

20) 상계논문, p. 141.

21) 서장원, 전계논문, p. 36.

22) 김성주, 전계논문, p. 63

승배 정책을 추진하였다²³⁾. 결국 한국전쟁을 통해 김일성은 북한의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북한의 권력구조는 느슨한 정치연합으로부터 빨치산파 중심의 단일지배체제로 변화되어 갔다.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안파와 소련파 잔류세력들에 대한 숙청을 진행했다.²⁴⁾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모스크바의 새 지도부는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을 바꿔 미국의 정전조건을 받아들이고 곧장 전쟁을 종결시켰다.²⁵⁾ 이 결정은 조속한 정전을 적극 지지하던 김일성의 요구와도 일치된 것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와 평양은 미국과 전쟁을 지속하려는 모택동에게 포기를 압박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였다.²⁶⁾

종전 이후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1956년 발생한 ‘8월 종파사건’²⁷⁾이다. 1956년 8월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연안파인 최창익과 윤공흠 그리고 소련파인 박창옥 등이 연합하여 김일성의 독재적인 개인승배 등을 문제로 삼아 비난하면서 김일성에게 도전했다. 이것이 바로 ‘8월 종파사건’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비대해진 빨치산파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 해 주모자였던 최창익 등 일부는 숙청을 당하고, 서휘·윤공흠 등은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정책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① 유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하는 국가 영도체제문제와 ② 당의 뿌리문제, 즉 혁명전통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²⁸⁾

‘8월 종파사건’ 당시 김일성의 반대편에 있었던 소련 주재 북한 대사였던 이상조는 ‘8월 종파사건’ 실패를 목도하고 소련 지도부에 도움을 요

23) 서장원, 전계논문, p. 37.

24) 서장원, 전계논문, p. 37.

25) 김보미,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서울 : 한울, 2013), pp. 87 - 89.

26) 선즈화 저,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 선인, 2014), p. 69.

2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지식사전』, p. 30,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28)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서울 : 선인, 2011), p. 92.

청하였다. ‘8월 종파사건’ 당시 중국과 소련은 북한정권 설립의 후견인과 한국전쟁의 지원군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30만 명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이상조 주중 북한대사는 소련 수상 후루시초프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하여 소련과 중국공산당이 직접 조선노동당의 당내 상황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은 소련 지도부에 전달되었고 곧 효과를 발휘하였다. 중·소 양국은 북한노동당의 당내 정세에 대해 토의한 후 당시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에 참석해 있던 미코얀(부수상)과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팽덕회를 북한에 긴급 파견했다. 두 사람은 9월 23일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9월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윤공흠 등에 대한 출당·철직 처분 철회, 김일성의 개인승배 중지, 집단지도체제 도입, 경제정책 조정 등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공동간섭에 나섰다.²⁹⁾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반대파들을 복권시켰다. 그러나 김일성은 9월 전원회의에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더욱 강화하며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을 강조해 후일을 기약했다.³⁰⁾ 실제로 김일성은 미코얀과 팽덕회가 떠나자 태도를 바꾸어 반대파 척결사업을 추진하였다. ‘8월 종파사건’의 주모자와 연루자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선 것이다.³¹⁾ 그리고 1956년부터 1957년 초에 걸쳐 전당적으로 당증교환사업을 벌여 당원들의 사상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안파는 사실상 거의 전원이 당에서 밀려났고, 뒤이은 1958~60년 기간에 전개된 소련파 숙청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련파는 대부분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8월 종파사건에서 김일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10년간 지속되었던 파벌 투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하게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북한만의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즉 독재체제 탄생의 해로 1945년이 아니라 1956년으로 부르고 있다.³²⁾

29) 서장원, 전개논문, p. 41.

30) 정창현, 상계서, p. 122.

31) 서장원, 상계논문, p. 42.

2.2 김일성 1인 독재체제 구축

1950년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면 1960년대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 확립과 함께 독재체제가 완결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당·군의 일체화’ → ‘당에 대한 유일사상체제 확립’ → ‘군에 대한 유일사상체제 확립’ 順으로 진행되었다.³³⁾

당·군의 일체화는 1958년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총정치국 내 주요 간부들이 대규모 숙청을 당하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1958년 3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총정치국장 최종학을 비롯한 총정치국 간부들이 총정치국에서 지방주의·종파주의를 퍼트리고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무시하는가 하면, 군을 ‘당의 군대’가 아닌 ‘조선전선군대’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숙청을 당했는데, 총정치국 간부들로부터 시작된 숙청은 1959년 전 부대로 확대되었다.³⁴⁾ 이 시기 천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중국이나 소련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당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일성의 만주파가 이를 계기로 군대내 비만주파를 제거하고 만주파를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게 되었다.³⁵⁾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총정치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민군대내 당위원회를 설치’하는 인민군당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회의의 결정서에는 “군대내 당 정치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전 군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킬 것과 전 군은 항일 빨치산처럼 투쟁하고 목숨으로 위대한 수령을 보위해야 한다”는 것과 “군대 내 당 단체 정치기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는데,³⁶⁾ 과거 군사단일제의 원칙하에 각급 당 위원회에는 부대장과 정치부대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모든 간부가 당위원회에 소속되고 당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³⁷⁾

32) 이상우, 『북한 정치변천』 (서울 : 오름, 2014), p. 79.

33) 서장원, 전계논문, pp. 43 - 50.

34) 서동만,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형성”, 『외교안보 연구』 제2호(1997), pp. 167 - 172.

35) 서장원, 상계논문, p. 44.

36) 여정, 『북계 물든 대동강 : 전 인민군 정치위원의 수기』 (서울 : 동아일보사, 1991), p. 157.

37) 서동만, 전계논문, pp. 172 - 173.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일성은 1962년부터 주체사상이란 용어로 독자적 생존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1962년 쿠바사태와 중소 국경분쟁을 보면서 12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고,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958년 군대내 당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당내 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군대에는 당 조직이, 당에는 군사기구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군은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명실상부한 당의 군대로 정비되었다.³⁸⁾

당에 대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갑산파가 숙청당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1967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실행 방안을 놓고 갑산파인 당 서열 4위 박금철과 5위 이효순 등은 7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김창봉·허봉학·최광·최현·오진우 등은 “사회주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중공업 발전이 중요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³⁹⁾ 이에 김일성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군부의 손을 들어주고 갑산파를 숙청하는 쪽으로 정책대립을 해소하였다.⁴⁰⁾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쟁점은 유일사상의 체계화 문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의 문제’ 등이었으며, 박금철과 이효순은 이 회의를 통해 숙청되었다.⁴¹⁾ 이 사건으로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자’는 구호가 나타났으며, 당 지도부는 김일성의 사상으로 규정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대중학습을 진행시키는 한편 이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는 교양사업과 병행시켜 추진해 나갔다.⁴²⁾

갑산파 몰락 이후 주목할 권력투쟁은 1969년 김창봉·허봉학 등 군부 강경파에 대한 숙청사건이 있다. 갑산파 숙청을 통해 당내 유일사상체계

38)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p. 62.

39)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 박영사, 1999), p. 43; 김성주,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과정 연구,” 『현대 북한 연구』 제18권 2호(서울: 한울, 2015), p. 298.

40) 서장원, 전개논문, p. 49.

41) 김성주, 상계서, p. 298.

4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30.

확립이 마련되었다면, 김창봉·허봉학 사건은 군대내 김일성에 대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⁴³⁾

이 사건은 북한이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문제로 군사국가화 경향을 띠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갑산파인 당권파를 제거한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대남사업국장 허봉학 등 군부파가 또 다시 같은 만주파 당 지도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당권 도전이라는 이유로 숙청당한 사건이었다.⁴⁴⁾

민족보위상 김창봉은 1967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강된 군비투자를 바탕으로 전군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군사력 증강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군사적 모험심리를 자극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비무장지대일대에서 수차례 군사도발을 했고,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과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 등을 자행하였다.⁴⁵⁾

그러나 ‘1.21 청와대 침투사건’ 실패는 북한 지도부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을 목표로 했고, 남파된 게릴라 중 김신조가 생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1 청와대 침투사건’ 2일 후 발생한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은 곤란한 북한의 정세를 반전시키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북한은 ‘1.21 청와대 침투사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카드로 ‘푸에블로호 사건’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푸에블로호 사건’을 대내외 선전용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무력도발로 일관해 온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1968년 중반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적화야욕 실현을 위한 군사모험주의에서 벗어나 남한 내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군사모험주의 전략 변경은 대남공작 목표도 변화시켰다. 청와대 기

43) 서장원, 전제논문, p. 50.

44)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 116.

45) 이신재,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1호(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 미시연구소, 2014), p. 164.

습과 같은 파괴적 군사력 투사 행위에서 벗어나 남한내 혁명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 인민위원회 창설과 정치선전사업, 지하거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무력도발에서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전술로 수정되면서 군부 강경파인 김창봉·허봉학 등은 변경된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 특히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임무 실패로 군정에 쫓기던 무장공비들이 동조하지 않은 주민들을 살해함으로써 남한 내 반공정서를 더욱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대남공작사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⁴⁶⁾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유일적 지도자’로 거듭나려는 ‘수령’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자, 김일성이 군부강경파의 모험적인 행동을 불신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군사모험주의 전략실패는 당·군 관계에도 크나큰 변화를 불러 왔다. 정치위원제가 실시되면서 군에 대한 당적통제는 강화되었고 군부의 자율성은 축소되었다. 북한군 작전지휘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군사유일제가 약화되면서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정치위원제 실시는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강화되는 국면에 김정일이 당을 장악하면서 군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실패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군부강경파의 ‘좌경동맹주의 또는 수정주의’ 탓으로 돌리고 독자적인 군사도발로 매도하면서 이들을 숙청하였고, 이는 군을 ‘당과 수령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후처인 김정숙 등과 후계자 다툼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던 김정일에게도 군에 대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로서 성격이 더욱 공고해졌고, 군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구축은 더욱 체계화·가속화되었다.⁴⁷⁾

이와 같이 김일성은 한국전쟁과 종파사건을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고, 갑산파와 군부숙청사건으로 이어진 권력투쟁에서 ‘피의 숙청’으로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1969년을 기점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완성하면서 절대 권력자로서의 확고한 독재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46) 서장원, 전계논문, p. 54.

47) 상계논문, p. 55.

2.3 북한군의 기능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지도자는 혁명적 전쟁관을 제시하고 있다. 레닌은 전쟁을 혁명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혁명 성취에 기여하는 한 어떤 형태의 전쟁도 정당화된다고 선언하였다. 그 뒤 모택동도 이런 전쟁관을 승계 발전시켜 이른바 ‘마오의 혁명전쟁론(革命戰爭論)’을 제시하였다. 마오는 전 계급전쟁 불가피론과 민족해방전쟁의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혁명의 최고 형태는 무력에 의한 정권탈취”이고, “전쟁에 의한 문제해결의 최상”이라든지, “총구로부터 정권이 탄생한다”는 등의 전쟁론을 폈다. 김일성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정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지 선거놀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장투쟁, 민족해방전쟁이다(1968.2.8.의 연설문)”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전쟁을 혁명의 최선의 수단,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식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⁴⁸⁾

이러한 북한군의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⁴⁹⁾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군, 즉 ‘조선인민군’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노동당 규약 제 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노동당 규약 제 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2016년 개정된 북한의 헌법을 보면,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 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48) 이상우, 『북한정치 변천,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서울:오름, 2014), p. 260.

4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p. 103.

독립,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군은 별도의 대남 전쟁포기선언과 평화정책 이행관련 실천이 없는 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 ‘통치자 수호’, ‘체제보위’, ‘국익(國益) 기여’라는 역할과 함께 대외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해석된다.⁵¹⁾

2.3.1. 북한군의 대내적 역할

북한군의 대내적 역할은 첫째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을 기념하여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 당·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이다”라는 사설에서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수령옹위와 혁명수뇌부 보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 충성을 다 해야 할 것이다”⁵²⁾라고 강조하였다. 즉 수령의 사병(私兵)으로 전략한 조선인민군에게 혁명의 수뇌부 보위는 최고 성스러운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병으로 인해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기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군대뿐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특혜와 배려로 군의 절대적인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⁵³⁾

김정은 시대 들어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무위원회가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전반적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⁵⁴⁾하는 한편 군부대 현지도 시 군부의 임무를 강조

5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p. 103.

51) 상계서, p. 103.

5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eview-rodong/rodongsinmun-05022017135915.html, “조선인민군, 수령의 사병으로 전략”, (RFA, 2017.5.3.)

53)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계서, p. 103.

54) 상계서, p. 107.

하고 상기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017년 3월 1일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양 인근 평양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966대연합부대를 방문하여 당 지도부 즉 혁명의 수뇌부 보위와 전쟁준비를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김정은이 조선인민군의 전쟁준비와 함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혁명의 수뇌부 보위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천겁, 만겁의 성새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 갈 멸적의 의지를 안고 싸움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⁵⁵⁾

둘째, 북한군은 체제를 보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핵문제’ 등으로 위기 때마다 ‘체제수호의 전위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8년 3월 9일자 로동신문 정론에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 함으로써 총을 쥔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군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켜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역세계 준비”하고, “최고사령관(김정일)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군대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즉 인민군대의 혁명사상이 퇴색되면 적과 평화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 붕괴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중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군은 군사정책 기조로 4대 군사노선을 표방하고 1998년 9월 5일 개정헌법 제 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 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 노선을 관철한다”고 명문화

55) 『로동신문』, 2017년 3월 1일.

56) http://korea318.com/client/say/s_viw.asp?idx=48&cpage=1, “김일성 비밀교서 전문”, (2017.12.22.)

하였다.

이러한 체제보위와 더불어 체제안정 유지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위성은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반당·반체제 주민들과 사상 이반자들을 색출·감시하는 핵심적인 체제 보위·규율 조직으로 북한 체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은 우리나라의 경찰조직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와 사회주의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군대 조직과 같은 성격으로 편성되고 운영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경찰 조직이 무장집단인 군대 조직과 동일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다른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병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⁷⁾ 인민보안성의 최고 책임자는 현역 준장성이고 부부장급도 역시 중장이나 상장급이다. 국장 및 부국장급은 장성이나 영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의 대부분은 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북한군은 국익(國益)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군은 경제건설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병력을 고속도로, 발전소, 아파트, 목장, 양어장, 수로공사 등 각종 경제건설 현장과 위탁영농·어로활동·검문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⁵⁸⁾ 심지어 해외 인력수출로 외화벌이에도 앞장서고 있다.⁵⁹⁾

1986년 각종 댐 건설을 위해 군병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노력동원 운동이 보편화된 이래 군민일치⁶⁰⁾ 기풍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은 대민지원 일환인 농촌일손돕기, 농촌시설지원 및 재해복구지원 등의 임무도 당연시하고 있다.

57) 이민룡, 『북한군 대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 184.

5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 이해』, p. 106.

59) KBS 뉴스, “현역 군인까지 ‘외화벌이 노동자’ 수출”, 2016년 12월 20일.

6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지식사전』, p. 86, “‘군민일치(軍民一致)’ 운동은 군대와 인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는 기풍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절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데서 유래를 연원을 찾고 있다”

2.3.2. 북한군의 대외적 역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수단으로서 북한군의 역할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⁶¹⁾라고 한 발언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줄곧 남한을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이며 남한정권을 괴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 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⁶²⁾고 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미제의 충실한 괴뢰이며 침략도구입니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썬폭압기구입니다”라 하였다. 미국의 식민통치인 군정에 대해 남한 인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³⁾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 정권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 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반동정권”이라 하였다.

북한의 남조선혁명은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⁶⁴⁾ 적대세력인 미국을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해야 남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총과 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무장집단인 북한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계화 된 것이 ‘4대 군사노선’으로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

61) 김일성, “인민 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제하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54년 12월 23일.

6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229 - 230.

63) 『조선대백과사전 5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7), p. 150.

64) 김일성, 전게서, pp. 388 - 389.

택한 이래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2년 헌법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명문화 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⁶⁵⁾

2.4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

김일성으로부터 비롯된 독재정권인 북한 체제에 있어 군부의 정치적 위상은 군부 엘리트들의 노동당 기구 및 국가통치기구에서의 참여 정도와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의 역학관계, 그리고 군사비 지출 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1. 김일성 유일사상확립 기간(1948년~1968년)

해방 이후 북한군의 위상은 당시 북한의 특수한 내·외부 환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창건과 공산당의 형성,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창설이 외부의 조력 즉 소련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 정권 창건 직후부터 다른 국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국경 너머에 강력한 적이 존재하고 있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완결지어야 할 혁명의 다른 목표가 존재하고 있었다.⁶⁶⁾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북한은 정권 창건의 강력한 조력자인 소련의 정치체도를 모사⁶⁷⁾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당의 대군우위로 나타났다.

1946년 제1차 당대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인물 중 군부 인물은 전체 인원의 약 19%인 8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김일성, 김두봉, 최창익, 주녕하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김책, 태성수, 김교영, 박정애, 박일우, 김창만, 오기섭, 박효삼 등이 포함되어 당중앙위 상무위원회가 되었다. 同 상무위원

6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 이해』, pp. 104 - 105.

66) 차두현, “북한 당·군 관계의 변화 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 52.

67) 상계논문, p. 53.

회가 후일 확대된 정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음을 볼 때 정치국 내에서는 박효삼, 박일우, 김책 3명이 군부를 대표한 것인데, 이는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이러한 비율은 소련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소련은 1921년~1981년간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군부의 정치참여는 각각 약 8% 수준이었고, 중국은 1945년~1982년간 각각 31%와 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⁶⁸⁾

이와 같은 현상은 1948년 3월 제2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부 엘리트들은 정치위원회에서 13%(15명 중 2명), 중앙위원회에서는 87명 중 15명으로 17%의 참여율을 나타냈다.⁶⁹⁾

1946년 제1차 당대회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은 당시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들이면서 조선인민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인원들이 당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군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을 제외하면, 보안국장을 거쳐 민족보위상으로 승진하면서 군의 수뇌부에서 활동했던 최용건,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을 비롯한 최현, 김광협 등과 같은 군 주요 지휘관들도 당내 직위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권 초창기 군부는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김일성을 비롯한 당 수뇌들의 방침을 내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무력집단으로서 전문적 기능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사력 증강의 측면에서도 해방 직후 수천 명에 불과하던 군 병력이 불과 4년 만에 10개 보병사단과 기갑사단 및 항공사단 각각 1개, 그리고 해군병력 포함 15~20만 병력으로 급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무력육성 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⁷⁰⁾

한국전쟁 전후 군부 지휘관의 정치참여율 또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직전인 1948년의 2차 당대회 당시 군부 현역 인사들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경우 13% 수준인

68) 차두현, 상계논문, pp. 53 - 54,

69) 상계논문, p. 54.

70) 상계논문, p. 57.

15명 중 2명, 당 중앙위원회에는 17% 수준으로 87명 중 1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1956년의 제3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회의 경우 13% 수준으로 15명 중 2명, 중앙위원회는 21% 수준인 116명 중 24명이 참여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⁷¹⁾ 한국전쟁을 통한 혁명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1958년까지는 전쟁피해 복구라는 의미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현역 또는 퇴역 장령인 빨치산 인사들의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소 이념 분쟁과 소련의 대북군사원조 삭감(1962~1964년간) 시기에 김일성은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공식화 하면서 4대 군사노선을 주창하였다. 김일성은 낙후된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군사력 건설이라는 양대 목표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의 강력한 지지기반은 빨치산 출신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위상은 1966년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전체 정치위원회 중 현역 기준 20명 중 35% 수준인 7명, 예비역까지 포함할 경우 20명 중 11명으로 5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이 선출된 11명의 정치위원회 위원 중 거의 전원이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인물이었다.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들도 4명은 빨치산 출신 현역이고 2명은 빨치산 출신, 나머지 인원 3명도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를 포함하여 빨치산 투쟁 경력이 있던 인물들로 후보위원회 전원은 빨치산 관련 인물들로만 구성되었다.⁷²⁾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으로 대변되는 호전적 대남전략으로의 전환은 중소분쟁이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체제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정치참여의 확대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고유이익을 추구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 들어 군의 정치참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비해 파격적일 만큼 확대되었으며, 군사비 지출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국가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1년의 2.8%에서 1964년에는 5.8%, 1966년에는 10%로 증가했고, 특

71) 상계논문, p. 65.

72) 차두현, 전계논문, p. 70.

히 1967년에는 30.4%로 증가했다.⁷³⁾ 이 시기 북한은 이전까지 구축된 기초적인 물량기반을 보다 확충하는 한편, 육·해·공군 간 전력구조 상의 균형화와 체계화를 이루었다고 분석된다.⁷⁴⁾

2.4.2. 김일성 권력공고화 및 권력 계승기(1969년~1994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 이후 빨치산 출신 군부 엘리트들의 지나친 정치참여 및 당·군 역할의 구분 모호성은 대남 및 대외 분야에서 무리한 정책추진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의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납파 사건’, ‘미 정찰기 EC-121기 격추 사건’ 등과 같은 과도한 적대행위는 미국과 소련 및 중국의 데탕트 분위기 하에서 중·소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행위였다.⁷⁵⁾

김일성은 빨치산 군 엘리트들의 필요성과 별개로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또 다른 빨치산 군 장성들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1969년 1월에 개최된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오진우가 비판회합을 주도하면서 총참모장 최광, 민족보위상 김창봉 등을 비롯한 현역과 허봉학, 당비서겸 사회안전상 석산 등 예비역 군부 인물 10여명이 숙청되었다. 이를 통해 김일성은 당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 중반부터 박차를 가했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정상 궤도로 안착하게 되었다.⁷⁶⁾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군에 대한 당의 우위는 더욱 강조되었다. 제5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수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제3장 27항을 통해 당 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고 군수사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지도한다.”고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73)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 청계연구소, 1989), p. 191.

74) 이규렬, “남북한 군사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pp. 49 - 59.

75) 차두현, 전제논문, p. 79.

76) 상계논문, p. 80.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였던 김정일은 권력기반 강화 과정에서 일천한 군 경험이 그의 최대 약점이었으나 오진우를 포함한 빨치산 원로들과 백학림 등의 한국전쟁 세대, 그리고 오극렬로 대표되는 ‘혁명 2세대’ 신진세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반대파를 제거하였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들 親 김정일 지지 세력의 지위상승 역시 꾸준히 이루어졌다. 김정일의 군 부장약 과정은 단순한 반대파 제거와 그에 따른 공백을 신진세력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체제 전반적으로 군부의 활발한 정치참여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6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군부 엘리트들은 정치국 정위원 34명(정위원 19명, 후보위원 15명) 중 8명이 자리를 차지하여 24%의 참여비율을 나타냈으며, 군부 경력인사들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35%까지 상승되었다. 이는 제5차 당대회 당시의 현역 20% 및 군부출신 인사 포함 44%보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혁명 2세대’의 대거 발탁으로 당·군 기능이 구분되고 기능 한계가 뚜렷해진 1980년대에 현역 군부 엘리트들이 정치국 구성원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은 군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명의 정치국 정위원 만을 중심으로 할 경우 군부 엘리트들은 현역을 기준으로 5명인 27%, 군부 경력인사들까지를 포함하면 47%라는 놀라운 정치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북한 군부의 위상 강화는 제6차 당대회 이후부터 지속되었다. 군부 엘리트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당 정치국 내에서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 비율이 보장되었고, 군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각종 행사에서도 김정일을 측근에서 수행하며 확고한 정치적 충성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군부는 단순한 ‘조력적 무력집단’ 보다 더 큰 의미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⁷⁷⁾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김정일의 본격적인 부상과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갑작스럽게 부각되었던 신진세력들의 정치적 위상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군부의 정치참여 수준도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

77) 차두현, 전계논문, p. 92.

하였다.

이러한 정치참여 수준 변화는 1986년 10월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발표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대의원 후보자를 공고하면서 발표된 정치국원 명단을 보면 오극렬, 오진우, 최광 등 3명만 잔류하였고 나머지 군부 인물들은 전원 제외되었던 것이다. 또한 1988년 2월 ‘혁명 2세대’로 정치국에 홀로 잔류하고 있었던 오극렬이 총참모장에서 해임되고 이어 정치국에서도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치국내 군부의 참여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군부 출신은 오극렬과 오진우 2명뿐이었고 참여율은 13% 수준을 보였으며, 군부 경력 출신인 박성철과 서철을 포함시키더라도 참여율은 25%에 불과하였다. 군부의 정치위원회 참여율은 제1차와 제2차 당대회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치국 후보위원 구성원까지 확대하더라도 군부의 참여 비율은 현역이 8% 수준으로 26명 중 2명, 군부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20%를 넘지 못 했다. 이러한 비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 주석단에서 군부 현역 인사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최광 총참모장 등 2명에 불과하여 참여율은 9% 수준이었으며, 군부 출신인 김철만을 포함할 경우 13% 수준이었다.⁷⁸⁾

이러한 군부의 정치참여율 수준 저하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 이전까지 ‘혁명 2세대’보다 정치적 비중이 낮았던 한국전쟁 세대들이 다시 권력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빨치산 출신이며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했던 김철만이 1990년 5월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고, 김일성의 친족이었던 리용무는 1970년대 후반 숙청된 이후 1986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복권된데 이어 1988년에는 당 중앙위원회로 재진출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부부터 1990년대 초반부까지 이러한 군부의 정치참여 비율 재조정은 ‘혁명 2세대’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빨치산 세대와 한국전쟁을 경험한 원로들을 우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⁷⁹⁾

78) 차두현, 전개논문, p. 96.

79) 상계논문, pp. 97 - 98.

김일성과 김정일은 당·군 경력이 풍부한 빨치산 세대 및 한국전쟁을 경험한 군부 엘리트들에게는 그들이 누렸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는 대신 차후 당·군 관계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추구할 위협이 있는 ‘혁명 2세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와 견제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5년 중·후반에도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건설은 지속되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부의 전문영역을 보장해 주는 한편, 이익의 공통성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80) 차두현, 전제논문, pp. 102.

III.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고찰

북한은 김일성 3년상(喪)이 종료되는 시점(1994.7.8.~1997.7.8.)인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고 그해 12월 12일자 ‘노동신문’에서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라는 정론을 통해 ‘선군정치’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1년 11월 18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선군정치 시효가 김정일이 1995년 1월 1일 동해안 북한군 제124군부대를 방문한 날’이라고 보도하였으나, 2005년 8월 24일자 ‘노동신문’ 정론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1960년 8월 25일 ‘근위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한 때부터”⁸¹⁾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일성의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선군사상으로 공식화 하면서 그 실현 수단으로 규정된 것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 하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북한이 선택한 고유의 통치행태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한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⁸²⁾로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통치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³⁾

따라서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으로,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통치이념이라 할 수 있다.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논리로서 ‘총대철학’에 기초한 혁명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先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

81) 차성근, “북한체제 변동 가능성과 북한주민 의식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p. 105 - 106.

82) 『노동신문』, 1998년 10월 9일.

8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p. 39.

한 구성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⁸⁴⁾

3.1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3.1.1. 역사적 요인

북한은 태생적으로 총과 칼의 역사로 점철되었고 이는 군사문화 중시 풍토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사회적 전통은 수직적 명령체제와 규율을 중시하는 군사문화에 익숙하며 이러한 환경은 김정일이 내부 상황 즉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의 경우도 ‘국방’을 중시하는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병영국가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국방을 중시하는 군사문화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병영국가적 親 군사문화는 김일성이 독재권력을 공고화 하면서 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만이 경험인 항일 빨치산의 무장투쟁경험을 강조하면서 비롯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이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군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었다. 그리고 점차 군의 전통을 뛰어 넘어 전 사회적인 혁명전통으로 강조되었다. 1967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⁸⁵⁾는 구호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⁸⁶⁾라는 구호로 정식화되었다. 1975년부터는 김정일이 중심이 되어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이 생산현장에서 전개되었다. 이전에 천리마운동을 ‘속도전’이라는 군사용어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이 시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밖에 ‘전격전’, ‘섬멸

8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p. 40.

85) 김일성, “1967년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 22돌기념일 전으로 앞당겨 완수한 공장, 기업소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0.

86)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7.

전’이라는 군사적 구호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한마디로 항일유격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대해 ‘고난과 난관’을 뚫고 역할을 다 하는 유격대원의 삶이 주민들의 학습과 토론 속에서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⁸⁷⁾ 따라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사령관과 전사의 관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 전통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문화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⁸⁸⁾

또한 북한 ‘수령유일지배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조직-운영원리는 명령-복종관계에 기초한 전 국가적 관료제로서 군대와 비군사 부분의 조직-운영원의 동일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⁸⁹⁾ 실례로 북한은 공장, 기업소의 행정과 생산구조를 군대식으로 개편하였다.⁹⁰⁾ 종전에는 철도, 운수부문만이 군대식이었으나 1962년 12월 이후 군수공장을 군대식으로 개편했고, 그 후 일반 공장, 기업소도 거의 군대식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노동도 전투이므로 군대식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체의 생산목표, 노동조직과 과정을 군사용어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명령규율은 ‘남조선괴뢰’와 ‘미제 침략’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강조와 ‘조국통일’이라는 체제의 소명성 강조를 통해서 합리화되어 왔다.⁹¹⁾

특히, 북한은 월남전의 전개와 중·소 분쟁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구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국방에서의 자위정책을 채택하였다. 자위정책은 구체적으로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되었다. 전 인민의 무장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한의 전주민이 유사시 싸울 수 있는 무장을 갖추으로써 무산계급을 전투요

87)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 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112.

88) 상계논문, p. 105.

89)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 90.

90) 이항구, 『북한의 현실』 (서울: 신태양사, 1988), p. 273.

91) 박형중, 상계서, p. 101.

원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인민의 무장화 노선의 일환으로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조직하여 전투병력화 하는 다병주의를 고수⁹²⁾하게 되었다. 이것은 군사문화의 확산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1962년 소집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으며, 1966년 10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현 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⁹³⁾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발전 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조국 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응당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경제·국방 병진정책’은 번영과 국방을 병행하여 도모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주 군사력 증강, 종 경제건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⁹⁴⁾

이처럼 북한은 항일무장투쟁 전통을 근원으로 하는 군사문화의 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침투, ‘4대 군사노선’과 ‘경제-국방 병진 정책’으로 인한 국방중시의 문화적 전통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북한의 군사문화와 국방중시의 전통과 쉽게 조화시켜 중앙집권적 통제 질서를 복원하고, 내부 체제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92) 장명순, 『북한 군사연구』 (서울: 팔복원, 1999), pp. 125 - 130.

93)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76, 469.

94) 이기원,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 분석』 (서울: 국토통일연구소연구실, 1977), p. 53.

3.1.2 내부적인 요인

3.1.2.1 극심한 경제난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불어 닥친 경제난은 북한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식량난 등으로 인해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주민들이 암시장을 통해 상당부분의 생활용품을 자력으로 조달해야만 했다. 또한 국가재정의 감소로 인해 공장, 기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통화금융체계도 거의 마비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총체적 분화현상은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균열을 초래하였다.⁹⁵⁾

북한 경제는 아래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연평균 8.2%, 1970년대 5.9%, 1980년대에는 3.2% 성장하는 등 1980년대까지는 점차 속도가 둔화됐지만 그런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⁹⁶⁾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잇단 붕괴로 인한 대외무역여건 악화와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등 사회주의 경제 모순으로 인해 199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0년 마이너스 4.3%, 1991년 마이너스 4.4%, 1992년 마이너스 7.1%, 1993년 마이너스 4.5%, 1994년 마이너스 2.1%로 계속 하강세를 보이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총회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대 이하의 성과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다.

[표 3-1] 북한의 경제성장 추이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성장률(%)	8.2	5.9	3.2	-4.3	-4.4	-7.1	-4.5	-2.1

* 서정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부 위상 변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15. 및 통계청 북한통계 자료 활용 자료 재정리

북한은 지속적으로 경제자립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강조해 왔

95)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서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서문

96) 『동아일보』, “식량난, 軍 전진배치, 체제불안”, 1994년 12월 1일.

지만 198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경제에 예상을 뛰어 넘는 심각한 수준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계획 당국인 정부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생산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생산단위에 대해 원자재와 노동력을 제공해 주면서 생산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전체 원자재 수입의 30~40% 수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각 공장과 기업소 등에 공급 가능한 원자재의 총량이 30~40% 축소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북한 경제를 고려해 볼 때, 경제 생산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명백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⁹⁷⁾

북한의 경제난은 크게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난 중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식량난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량부족은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적 통제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가장 큰 위기의 요인이 되었다.⁹⁸⁾

그동안 북한은 농경지의 부족과 척박한 영농환경 등 자연적인 요인과 주체농법 및 집단영농 방식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식량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하여 비료, 농약 및 기타 영농자재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급속히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⁹⁾ 또한 설상가상으로 1993년의 냉해, 1995~1996년의 엄청난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적 기아’의 진입 단계로 평가되는 위기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¹⁰⁰⁾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되어 1996년 말부터는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였다.¹⁰¹⁾ 이로 인하여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하였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탈

97) 박석삼, 전게서, pp. 112 - 113.

98) 서정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부 위상 변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15.

99) 최천모, “북한경제의 정체성과 식량수급 전망,” 『한국동서경제학회』 제11집 2권(1999), p. 127.

100) 임원혁,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 『KDI 정책포럼』 제129호(1997.11)

101) 서재진 외, 『북한 인권 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7.

출하는 탈북자가 30여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¹⁰²⁾ 이와 같이 주민들이 생존의 한계상황에 직면하자 그들의 의식구조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저변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조직화되었으며, 농민시장과 같은 지하경제가 확산됨으로서 국가의 정상적인 유통망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경제계획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⁰³⁾

둘째, 에너지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에너지 공급 부족은 전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활동의 저하와 물자난 가중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였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이념에 따라 에너지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급적 국내 가용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북한은 석탄 중심의 공업체계 건설에 주력한 결과, 에너지 자급도를 80%까지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채탄설비 낙후와 탄광자원 고갈로 인하여 석탄생산량이 부족해지면서 에너지 공급체계뿐만 아니라 산업생산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전력생산 중 화력발전이 47.4%를 차지¹⁰⁴⁾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생산량의 감소는 전력생산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에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다. 원자재가 부족한 북한에서 원유는 에너지원의 약 7~8%로서 평시에 일정 수준의 공장 가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백만 톤의 원유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중단되었으며,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만이 전략상 외상형식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원유대금을 국제시장 시세에 따라 경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91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1년 187만 톤이던 것이 1999년에는 31.7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1991년부터는 공장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였고, 1994년 이후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하여 북한 최대 규모인 김책제철소(연산 2백 40만 톤)의 경우 원료인

102) 서재진 외, 상계서, p. 170.

103)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 연구』 제1권 1호(1997), pp. 179, 193.

104) 최수영,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52 - 53.

코크스 부족으로 용광로 3개 중 2개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함경북도 승리 화학공장의 경우 원유 부족으로 1994년 4월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⁰⁵⁾ 특히 석유는 북한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송용 연료이므로 원유수입의 감소는 교역이 제한된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심각한 문제는 외화부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외화부족 문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경제에서 주체’를 통해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0년대 들어 자립경제정책을 포기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기술, 자본, 설비를 도입하며 산업화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소련으로부터 9.1억 달러, 서방 각국으로부터 12.4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197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하며 외자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석유위기와 함께 주수출품인 비철금속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외자유치는 1993년 말까지 10년 간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약 90%가 조총련과의 합작이었다.¹⁰⁶⁾

북한은 누적된 채무와 부정적인 국제신용으로 인해 1987년 8월 17일 서방은행들로부터 공식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국가’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외자도입이 거의 중단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 차관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중·소 차관원리금과 무역수지 채무 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1990년대 들어 중·소가 북한에게 채무상환 및 주요 품목의 경화결재를 요구하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북한의 국가외채는 1980년 22.3억 달러였으나 1996년에는 약 120억 달러로 1980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 GNP 대비 외채비율이 56.1%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러한 외화부족은 북한이 원유, 코크스와 같은 원료를 비롯하여 식량 및 면화와 같은 일부 농산물 수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105) 동아일보, 전계기사, 1994년 12월 1일.

106) 남궁영,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효험은 있는가,” 『통일경제』 통권 제27호(1997.3), p. 36.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 상황 하에서 가용한 내부자원만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대의 노동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등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군정치가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1.2.2 사회통제력 약화

앞서 언급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의 중앙배급체계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식량배급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기관별로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식량해결을 목적으로 한 주민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통행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식량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묵인해 주었다.¹⁰⁷⁾ 김정일도 “다른 지방에 가 보아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역전과 열차 간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면서 “오늘 식량문제로 하여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다.”¹⁰⁸⁾고 토론했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배급체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일반 주민들은 식량·생필품을 비공식 경제부문인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다. 농민시장의 활성화는 비인가 시장인 암시장과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자영업을 하는 전문장사꾼은 약 70~80만 명으로 북한전체 인구에서 약 3~4%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⁰⁹⁾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은 개인 소유의 텃밭과 폐기밭에서 경작된 식량이나 배급과정에서 부정하게 빼돌린 양곡, 협동 농장원들이 분배받았던 곡물들 중에서 여유분들이다. 또한 암시

107)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 1999), p. 509.

108) 『경향신문』, “김정일, 식량바닥, 무정부상태”, 1997년 3월 20일.

109) 서정도, 전계논문, p. 19.

장에서 볼 수 있는 공산품의 경우 80% 정도가 국영상점 또는 군부대에서 부정하게 빼돌린 불법적인 유통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활발한 지리적 이동은 원활한 정보유통을 가져 왔다. 주민이동의 증가는 실체가 불분명한 루머성 소문과 접촉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보통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북한에서 전체 집단의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슬로건과 김일성 유일사상 교양은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이론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곤궁한 일상생활은 물질 만능주의와 배급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로 점점 변질되어 갔다. 당 관료들이 국가 배급품과 각종 자재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팔아먹는 등 국가자원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¹¹⁰⁾ 이와 함께 기업소나 공공기관 등의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청탁하기 위한 일탈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다양한 형태의 청탁을 위한 상하위직간의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직장 밖 당 상관에게까지 뇌물을 상납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¹¹¹⁾

북한의 이러한 사회적 일탈 현상은 북한이탈 주민의 증가현상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김일성 사망 이전에 연 10명 이내였지만, 1994년 이후로 한해 50명 내외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무려 85명, 1998년 72명, 1999년도에는 전년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48명, 그리고 2000년에는 전년도의 2배 이상이나 되는 31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¹¹²⁾

한편 1994년 이후 탈북 주민들의 특징을 보면 탈북규모나 체제이탈 동기, 연령, 유형 및 계층이 매우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1996년 12월의 김경호씨 일가 17명, 1997년 1월 22일 김영진과 유송일씨 가족 8명, 1997년 5월 22일 안선국과 김원형 양가 14명 등과 같이 가족 단위 집단 탈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96년부터는 전체 이탈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¹¹³⁾ 가족 단위 집단 탈북이 가능하다는 것은 북한 사회

110)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 1999), p. 512.

111) 김영윤, “북한 지하경제의 실태와 전망”, 『북한조사연구』 제1권 제1호(1997.8), p. 170.

112) 윤여상,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대구 : 세명, 2001), p. 77.

113)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1.5)

내 주민통제가 상당히 이완되었으며, 식량난 또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식량구입을 위한 중국월경과 각급 기관의 경쟁적인 외화벌이 사업목적의 국경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민들의 국경탈출 러시도 크게 증가하였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오가는 유동인구는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2~3천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였다. 1999년 4월 2일 국가정보원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며 역전이나 장마당 그리고 다리 아래 등에서 기거하는 꽃제비가 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994년에 1만 3,000명에 불과했던 부랑자가 3~4년 만에 식량난의 악화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 전역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월경자, 북한내 유민의 증가와 사회적 일탈행위 증가 등으로 혼란해진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민심의 동요 등 사회혼란을 우려하여 1998년 대대적으로 주민을 재배치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999년 4월 2일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민 재배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주민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정권 수립 이래 최대 규모였다.¹¹⁴⁾

최악의 경제난이란 상황에서 집권한 김정일에게 카리스마적 정통성은 곧바로 인민들의 지지와 직결되어 있다. 1994년에 귀순자들을 상대로 그 지지도를 추정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김일성에 대해서는 60~70%, 많게는 90%의 북한주민들이 지지하는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40~50% 정도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⁵⁾ 물론 이것은 북한체제와 김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북한 전체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지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일도 식량문제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114) 『경향신문』, 1999년 4월 3일.

115) 김병로,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1 - 100.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당 일군들이 지금처럼 일하면 앞으로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신의주 학생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없다.”¹¹⁶⁾면서 “난관 앞에서는 동요분자도 나올 수 있고 불평분자도 나올 수 있으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마비된 중앙통제시스템을 복원하고, 사회적 일탈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선군정치가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1.2.3 군부 장악

군대는 정치적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주체이다.¹¹⁷⁾ 따라서 군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보라는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 정치권력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일이 군대를 장악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최대의 물리적 폭력을 보유한 군부 자체의 정치적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정일에게 절대 충성하는 ‘김정일의 군대’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식량난과 경제난, 외부의 사상 문화적 침투로 인하여 정통성이 약화되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반란세력들을 제압하거나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권력승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1992년 군사중시를 강조하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강조하여 오지만 정권은 무력에 의하여 보위됩니다.”¹¹⁸⁾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정일은 1990년 초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내부교시’를 내린 적이 있다.”¹¹⁹⁾ 최주환은 계속해서 “이는 김정일이 군부 장악을 국가유지의 요체에서 뿐만 아니라 권력승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116) 『경향신문』, “김정일, 식량바다, 무정부상태”, 1997년 3월 20일.

117)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서울: 박영사, 1999), p. 100.

118)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때 대하여,” 『김정일 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

119)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장악,” 『WIN』 (1999년 6월호), p. 161.

있다는 확실한 근거이다. 내가 아는 한 김일성도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려면 군부를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치감치 간파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민군대를 방문할 때 김정일을 언제나 데리고 다녔다.”¹²⁰⁾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군대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통수권의 승계와 함께 인민군 군인들로부터의 자발적인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은 “만일 군대 내에서 사상적 통일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군대는 체제유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으로 급속히 전환될 수 있다.”¹²¹⁾고 주장했다. 북한 역시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의 몰락이나 구소련 군대의 붕괴원인을 군대의 동요와 사상 정신상태에 있다¹²²⁾고 보았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항일무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경력이 없는 가운데도 당의 조직, 선전선동 및 군사관련 지도부문을 발판으로 군 지휘중심이 아닌 군의 정치적 통제 중심의 지도권을 우선적으로 장악했다. 김정일은 1980년 당 중앙위 군사위원으로 선출되고 난 후 실질적인 군사지휘직책인 최고사령관직으로 추대된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군사지휘참모직책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비록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직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기는 하였으나 “군 경력이라고는 김일성 대학시절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고작인 그가 군사전략, 전술을 어떻게 알겠는가?”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지도한답시고 모두 망쳐 놓더니 군까지 망쳐놓으려 한다.”는 등과 같은 군내의 불평불만들이 있어 왔다고 한다.¹²³⁾

1995년에 귀순한 강성산 총리의 사위 강명도의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 푸른제 종합군사대학 출신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남산학교를 거친 50대 엘리트 소장파 장교들이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사열 및 열병식에서 주석단을 즉사시키려는 쿠데타를 기도¹²⁴⁾했다고 주장

120) 최주환, 전게서, p. 161.

121)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p. 156.

122)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4-5.

123)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82-83.

124) 강명도, 『북한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pp. 255-272.

한 바 있다. 이 음모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제2의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인민군 상좌 출신인 최주환 역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죽기 오래전부터 이미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단언하면서도, 1992년에 일어났던 ‘푸른제 사건’과 같은 반김정일 음모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장악”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다¹²⁵⁾고 했다.

또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최초의 탈북자였던 윤대일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 6월경에 인민군 제6군단에서 군단 정치위원과 군단 포병부 사령관을 비롯한 군관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¹²⁶⁾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도 “1995년 6군단에서 반김정일 조직이 드러났을 때에는 소좌급(소령급) 이상 장교들의 가족까지 모두 총살하여 피바다를 이루어 놓았다고 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저항의 조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군대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최대의 폭력집단으로서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위협이 되는 무장 집단인 군대를 장악 통제하고 체제수호와 권력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1.2.4 김정일의 확고한 지도자상 미확립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사상적 완전성이나 경험에서 나온 지도자상을 확립하지 못한 가운데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김일성은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투쟁 경력과 항일투쟁을 통한 ‘조선해방전쟁 승리’, 한국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함께 초인적 자질을 갖춘 ‘위대한 수령’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북한사회를 통치하였다. 북한 건국 주역인 김일성의 그늘 아래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 정통성을 계승

125) 최주환, 전게서, p. 167.

126)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2002), pp. 138 - 146.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부친인 항일유격대장 김일성과 모친인 유격대 전사 김정숙을 이른바 ‘혁명적 가문’으로 선전하고 자신의 ‘비범한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온전히 계승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맞서 소위 ‘신출귀몰’하게 투쟁한 항일무장투쟁 경험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최고지휘관으로서의 화려한 군 경력 등 김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리스마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 심각하게 다가온 경제난과 식량난은 김일성의 권력을 세습하는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카리스마는 일반 인민들과 달리 지도자만의 독특한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므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아사자와 유민이 증가하고, 절박한 경제상황이 지속될수록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세습 과정에서 김일성이 지니고 있던 수령으로서의 카리스마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3.1.3 외부적 요인

3.1.3.1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팽배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 중국의 경제적 개방, 미국 중심의 신 국제질서 형성 등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1990년대 이후 변화된 북한의 대외적 상황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북한의 가장 든든한 핵심 우방국이던 동구 사회주의권이 체제전환을 가져오고, ‘북한-소련-중국’의 3각관계가 와해됨으로써 이념적, 군사적으로 힘의 우위에 입각한 한반도 적화전략을 추진해 온 북한의 안보전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¹²⁷⁾ 특히 이념적 정통성을 공유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의 체제 및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이념적으

127) 홍관희,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외교-한계와 전망,” 『북한조사연구』 제1권 2호(1998), p.128.

로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89년 12월 북한의 형제국가로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의 붕괴와 1990년 10월 동독의 흡수통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다.¹²⁸⁾ 왜냐하면 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연경효과(coupling effect)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가 북한 내부에 도미노 영향(domino effect)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²⁹⁾

북한은 동구 공산권 국가들을 침몰시킨 자유주의 사조 물결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내부의 사상적 동요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붕괴되었다는 사실에서 북한은 외부 사조의 유입을 어떠한 위협보다 심각하게 간주하였다.

북한은 “구소련(舊蘇聯), 동구권(東歐圈) 등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도 사회주의를 신념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 하는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선차적 사업”¹³⁰⁾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은 사회주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말아먹게 된다.”¹³¹⁾고 사상의 침투를 경계했다.

이러한 사상적 변질을 차단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선군사상은 매우 효과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이며, 선군사상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전 영역에서 외부 사상 유입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3.1.3.2 한반도 주변국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체제위협 직면

남한은 노태우 정권 당시 1989년부터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

128) 『중앙일보』, 2004년 11월 30일.

129) 김창근, “북한체제 위기의 본질과 김정일 정권의 변화수용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원고 (1999.4.30.), p. 14.

130) 『로동신문』, 2016년 11월 1일.

131) 『조선중앙방송』, 1995년 7월 10일.

관계를 맺고 베트남과도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동맹 관계는 급속히 와해되었다.¹³²⁾ 이와 함께 1991년의 걸프전쟁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미국이 유일한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는 군사력의 패권화 현상이 촉진되었다.¹³³⁾

그리고 1991년 5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1994년 6월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폭격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군사적 긴장은 매우 고조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철천지 원수’로 여겨왔던 미국의 안보위협을 체감하게 되었으며, 체제의 안보를 위해서 대미협상력 강화와 자위적인 국방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1993년 핵문제와 관련하여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미국의 공격을 매우 걱정하였으며 카터 前 미국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크게 환영”하였으며, “김정일은 미국만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라고 하며 강경 고자세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하였다.”¹³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연설에서 “지금 적들은 우리가 일시적인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회주의도 붕괴될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 올 것입니다.”¹³⁵⁾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우방국의 상실과 한층 강화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심화는 북한 수뇌부에게 상당한 안보위협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심각한 고립 상황 속에서 대외협상력 제고와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132)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p. 213-216.

133) 상계서, p. 218.

134)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 287.

135)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3.2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위상 강화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내부동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에너지난 및 외화와 식량부족 등 경제난과 핵 무기 개발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 등 대내외적인 체제위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력 제고 일환으로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군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당은 물론 국가의 각종 군사기관들이 부각되고 그 위상 또한 강화되었다.

3.2.1 군사권력 기관의 부상

김정일 시대 들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맞이한 군사권력 기관은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보위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국방위원회는 197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로서 위상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역할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던 기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김정일 후계승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경험이 없는 김정일에게 군통수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기 시작하면서 그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2년 헌법에서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면서 국방위원회 위상이 공식화 되었다. 이 헌법에서 주석의 국방위원회에 대한 지도권한이 삭제되면서 국방위원회는 독립적인 주권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 5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김정일과 군부 인사인 오진우와 최광을 선출하였으며 전병호 등 7명을 국방위원으로 선출하였다. 1990년 이후 국방위원회의 인물 구성상의 변화 현황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국방위원회 구성인원 변화 현황

구 분	구 성 인 원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부위원장 : 김일철, 리용무 • 위원 :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부위원장 : 연형묵, 리용무 • 위원 :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최룡수, 백세봉 ※ 2003년 탈락자 : 백학림, 리을설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부위원장 : 김영춘, 리용무 • 위원 : 김일철, 전병호, 백세봉, 리명수, 현철해

* 북한연구소, 『북한 통권 제436호』, (서울 :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2008. 4)

당의 군사위원회가 군부 핵심 직위자들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국방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제2경제위원회 및 군수공업 분야 최고책임자인 전병호, 김철만, 김광진, 김봉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역시 북한 체제 특성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를 받는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며 군부 인사가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한을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 발의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국방위원회 기능을 볼 때 국가기관 중에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또한 장령급 주요 군사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그리고 장령들의 군사칭호 제정과 군사칭호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고 군사기관이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군사지도자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고(1992년 헌법 113조),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1992년 헌법 115조) 이처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구헌법과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이 보유하고 있었던 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최고 권력기관의 자리라 할 수 있다.¹³⁶⁾

136) 김병조·오궁현,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 변화와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97-12』 통권 제279호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pp. 13-14.

한편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사실상의 최고통치기구로 주목 받았다. 군사관련 기관이 국가의 최고통치기구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 비롯된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방위원회의 강화는 군부의 정책참여 확대 및 영향력 강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두 번째, 최고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위원회와 함께 전쟁지도기구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지휘하였으나 전쟁 후에는 김일성이 직접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에 대응한 전투동원준비태세를 하달하는 등 몇 가지 사례 외에는 최고사령부 명의를 활동이 식별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의 헌법이나 당 규약에는 최고사령부나 최고사령관에 대한 지위권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김정일이 1991년 12월 24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최고사령관 명의를 지시가 수시로 하달되었고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도 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으로 호명되는 군부 인사들이 수행하는 등 최고사령부 활동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고사령부의 위상은 1996년 12월 21일 평양방송에서 잘 나타나는데, “최고사령부는 가장 중대하고 첨예한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작전하고 결정하는 혁명의 심장부”이면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는 전군·전민을 조직 및 동원한다”고 하며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음을 알려주었다.¹³⁷⁾ 이는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선군시대 선군혁명 수행의 핵심기구로 최고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¹³⁸⁾

세 번째, 보위사령부는 남한의 기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군내 사찰기구로 김정일 시대 반대세력 색출 및 제거에 앞장선 최고의 군부공안통치기구로 김정일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위사령부는 1990년대 초반 인민무력부 예하 안전보위국에서 보위국으로 개편된 후 1993년 소련 유학파 출신들의 쿠데타 모의사건인 ‘프론제 군사학교 쿠데타 모의사건’과 1995년 ‘6군단 쿠데타 사건’을 적발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김정일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1995년 보

137) 상계논문, pp. 102 - 103.

138) 김병조·오궁현, 전계논문, pp. 14 - 15.

위사령부로 확대되었다.

보위사령부 개편에 따라 기존 보위국장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단번에 승진하였고 보위사령부는 기존 업무인 군내 사찰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 국가급 사찰기관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안전보위부와 항상 권력다툼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다시 위상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보위사령부로 확대되면서 1995년경 탈북주민에 대한 단속업무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인민무력부로 일부 이관되었고, 보위사령부는 국경봉쇄, 탈북자 체포임무 외 경보병, 정찰병 등 특수부대 출신 제대군인들을 교육시키고 중국에 파견해 상류층 출신 탈북자 납치 및 남한첩보일꾼들과 반체제 인사, 중국에서 활동하는 종교인, NGO일꾼들의 납치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2.2 군부 엘리트 정치적 서열 상승

지난 1990년대 북한의 체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북한군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서열 상승은 군부 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 이후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군부 인사들의 권력서열 상승 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했다. 김정일은 현지도도 시 군부대 집중 방문, 군 관련 각종 행사 참여와 국가예산의 군사 부문 우선 할당 및 군부 엘리트들의 권력서열 상승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였다.

먼저 김정일의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는 1995년 이후 급증하여 2000년에만 다소 주춤했을 뿐 현지도도의 절반 이상을 군부대 방문에 할애하였다. 그러나 현지도도의 빈도가 줄었던 1995년을 제외하고는 6년 동안 평균 20회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투력 향상을 독려했는데, 1995~1997년간 김정일의 부문별 현지도도 빈도를 보면 전체 67회 중 무려 58%에 이르는 39회를 군사 분야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군정치가 본격화 된 1998~2002년간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462회 중 무려 37.4%에 이르는 173회를 군사 분야 리더십 확보에 집중하였다.¹³⁹⁾

한편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후 공개된 주석단 서열 변화를 통해 드러난 군부 엘리트의 권력서열 변화는 [표-3-3]과 같다.

[표 3-3] 군부 엘리트 권력서열 변화

☆ : 군부

서열	정권 창건 50들 (*98.9.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 (*99.4.7)	당 창건 55들 (*00.10.10)	김일성 생일 90주년(*02.4.15)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이종옥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4	박성철	홍성남	박성철	☆김영춘
5	김영주	이종옥	김영주	☆김일철
6	전문섭	박성철	홍성남	☆이을설
7	☆조명록	김영주	☆김영춘	☆백학림
8	☆김영춘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9	☆김일철	☆이용무	☆이을설	한성룡
10	☆이을설	☆김일철	☆백학림	계응태

* 두병영, “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108.

김정일의 군우대 정책은 주석단 서열에서 군부 인사의 급격한 수직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위의 [표 3-3]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석단 명단에서 군인사의 서열 상향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02년 4월 15일 김일성 90주년 생일의 주석단 서열을 보면 명목상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제외하고는 군관련 담당 인사를 포함하여 3위에서 8위까지 포진하고 있다. 이는 당의 서기국 비서들의 서열보다 높은 것이었다.¹⁴⁰⁾

이와 같이 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북한군 인사의 서열 상승이 곧 북한군으로의 권력 집중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당우위의 당·군 관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당조직이

139) 최준택, “김정일의 정치리더십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p. 79 - 112.

140) 이석수,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정책연구보고서 02-12』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2002), pp. 14 - 15.

군부를 통제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3.2.3 북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북한군의 위상은 과거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부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수령인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지휘관 출신으로 독재체제에서 군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후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군의 비교적 높은 위상은 정권 수립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은 물론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보여준 군부의 절대적인 충성심 발휘와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통치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 강화와 이에 따른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가 실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은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가 노동당의 당적지도에 따른 당우위 체제와 배치되는 것이고 반면 군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가운데 당의 우위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이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의 영향력 강화가 없었다는 주장은 김정일이 남북대화의 현장에서 군부의 반대 또는 군부의 입김 등을 거론하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설명해주지 못 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 군부의 위상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동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군의 실질적인 위상이다. 북한군은 김정일과 당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과거 김정남의 언급을 보면 김정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권력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집단이기도 하였다.¹⁴¹⁾ 김정일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군권을 장악한 조치가 이를 말해준다. 초기에는 군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군부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당의 총정치국 지도체계의 강화는 물론 군인사

141) 고미 요지(五味 洋治) 저, 이용택 역,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중앙 M&B 2012). p. 114, “부친은 군을 배경으로 국가를 통치했지만 지금은 군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작업이 실패하면 분명히 군이 실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권을 조직지도부로 이관하고 인민군 당위원회에서 말단세포 단위까지 집중검열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 관련 모든 보고문서에 관여하는가 하면 군 지휘관들에 대한 3중 동향감시와 유일사상 심화 교육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주요 군부 엘리트들의 권력서열 상승 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위상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김정일 독재체제 하에서 본다면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군부의 일정한 부문에 대한 역할 확대와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배려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군부 또한 정책 결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강화된 결과로 행동하기 보다는 김정일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권력 상층과 중층, 하층부에 골고루 포진한 강력한 충성집단으로서 김정일 체제를 결사옹호하고 반대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여론주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간에 군부의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 김일성 시대에 빨치산 세대들이 보여준 자발적이고 동지애적인 측면에서 헌신적으로 기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일 시대의 군의 충성심은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¹⁴²⁾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는 군부 엘리트들을 완전히 믿고 권력을 완전히 위임하는 체제가 아니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가운데 제한적으로 위임한 체제로 보여진다.

또한 군의 맹목적인 절대충성과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체제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반대로 사상적 유연성 증가나 충성심의 약화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반도 이북 지역에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북한군 내에서는 목숨을 바쳐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하는 인물만이 살아남았고 측근에 발탁되는 현실을 체험한 이상 반대는 곧 피의 숙청이라는 개념이 군부 엘리트들의 사고에 뿌리깊이 박혔고 자연스럽게 군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부의 위상강화가 김정일 시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로 직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군정치체제 하에

142) 박영택, “북한군부의 위상강화와 정책결정 영향력”, 『국방정책 연구 겨울호』 (2007), p. 159.

서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 및 군 관련 행사의 빈번한 참여와 김정일 와병기간 중 유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북한군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의 군사정책결정 과정의 특징으로 당과 국가기구 내에 군사기구가 각각 조직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도 당 및 국가기구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군사부와 같은 당의 군사기구에는 군부 지도자가 당 간부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당내 군사기구 내에 군부 지도자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군사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군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했던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2000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고 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을 보면 군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7개 합의사항 중 제2항은 “쌍방은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장관 사이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되어 있다.¹⁴³⁾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마치 제3자의 일처럼 환영한다고 표현한 것은 군부의 일을 합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 군사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상위 기구인 당정치국이지만 김용순은 정치국 구성원도 당 중앙군사위원도 아니다. 이런 일은 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문제에 관한 합의를 할 때 반복되어 나타났다.¹⁴⁴⁾ 인민군 통제체계는 당 조직지도부 → 총정치국 → 조선인민군으로 이어지며 이 체계에서는 당조직이 핵심이며 당군사부도 부장, 부부장이 현역이지만 인민군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군보다는 당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당조직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당군사정책은 어디까지나 당정치국, 당중앙위원회라는 상위기구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143) 『로동신문』, 2000년 9월 15일.

144) 이대근, 전계서, p. 272.

당이 군사문제를 결정한다는 원칙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당정책에 따라 군의 전통적 이익과 관심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밀집지역이면서 안보상 요충지임에도 군의 안보이익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군수, 인사 등 군 내부 문제에 대한 권한 또한 온전히 당에 맡기고 있는데 인민군의 자율성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 결정구조는 주요 군사정책의 결정기구가 당내에 있는 점을 들어 당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군의 지도자로 구성됐다는 점에서는 군사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군사정책 결정이 당 최고집단지도체구의 권한이라는 점에서는 군사정책의 상당 부분이 당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업주의적 자율성의 개념이 갖는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모든 군사문제를 군인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일부라는 자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¹⁴⁵⁾

김정일은 1990년대 불어 닥친 대내외적인 위협 상황 하에서 체제위기를 단속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부의 위상강화와 함께 선군정치를 주창하였다. 이와 함께 군민일치 운동 등을 통해 군부와 전 주민을 준전시상태로 몰아가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결속에 활용하였다. 특히 내부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로 맹목적인 충성심과 끈끈한 결속력을 가진 군부를 적극 활용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한 당연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직면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등 대내외 위기상황 하에서 체제위기를 수습하고 체제단속과 정권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군부의 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45) 두병영, 전계논문, p. 113.

3.3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역할 확대

3.3.1 군부의 정치·외교적 역할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군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수령과 노동당의 정치적 노선과 방침을 실행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로 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이 군사적 직책인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직위만을 활용해 북한을 통치하면서 군부의 정치적 역할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북한군대와 주민들에게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군대의 통합과 충성심을 유도해 내고자 하였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애하는 장군께서는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주체 83년(1994년) 8월부터 올해(1999년) 5월까지 만도 무려 12만 350여 리의 군부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오셨다.”¹⁴⁶⁾고 하면서 “탁월한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역세계 키워주시고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로 만난을 뚫고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거장”¹⁴⁷⁾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군사지도자로서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곧 군의 위상과 역할의 확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자신이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경력을 내세워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강력한 권위를 통해 군으로부터 자발적인 충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 경력이 전무한 김정일로서는 북한군이 김일성에게 보여주었던 충성심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146) 『조선중앙방송』, 1999년 7월 22일.

147) 『조선중앙방송』, 1999년 2월 5일.

김정일은 정권안정의 최후 보루인 군을 무조건적 절대적인 충성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군대로 존재해 왔던 군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김정일의 군대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김정일의 인식은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대내 당조직의 정치사업을 우선하고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정일은 1994년 10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현 시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라고 하였다.¹⁴⁸⁾ 이는 군이 당의 우위에서 당을 영도하거나 당을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대는 당의 무장력으로서 수령과 당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인민군의 정치화를 강화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과정을 지켜보면서 군대를 비정치화 내지 중립화하면 체제가 위기국면에 처했을 때 정권을 보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군대의 정치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였다.¹⁴⁹⁾

결국 군대가 당의 영도를 거부하며 비정치화 비사상화되면 그 자리에서 자본주의 사상독소와 부르조아의 생활양식이 자리 잡고 종교의식이 뿌리내리는 등으로 비사회주의, 비프로레타리아적 병균에 오염되게 되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¹⁵⁰⁾ 따라서 혁명무력의 위력을 강화하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잘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영도를 군대의 최고 임무로 보고 있으며 군대의 당조직인 총정치국과 당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권력서열 측면에서도 군총정치국장 조명록의 서열이 당비서들보다 앞서 김정일 다음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도 군내 당조직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군의 대외적 역할과 기능도 선군정치에 바탕을 둔 철저히 힘에 의존하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는 말과 구

148) 『로동신문』, 2000년 4월 24일.

149) 두병영, 전계논문, p. 213.

150) 김철우, 전계논문, p. 50.

호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해서 고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¹⁾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의 대외적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제국주의자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는 무적필승의 정치”, “제국주의자와의 정치·외교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담보하는 힘 있는 정치”¹⁵²⁾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외교전은 단순히 말과 말, 두뇌와 두뇌와의 싸움이 아니며, 능란한 외교의 배경에는 정치·군사·외교적 힘이 놓여 있다.”¹⁵³⁾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군력의 약화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혁명력량의 약화와 대외적 발언권의 상실을 가져 온다”¹⁵⁴⁾고 보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이처럼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대외적으로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 북한이 보유했던 협상수단은 소위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대내적으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권위를 강화하고 당·군민의 일심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일본 등 서방 진영의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군이 수행한 외교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10월 10일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이 군복차림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미국국무장관을 만나 공동코뮤니케 북·미공동선언을 발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공식적으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이 방문하지 않고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이 미국을 방문하고 특히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힘을 과시한 것은 선군정치의 상황하에서 북한군의 외교적 역할의 일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51)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152) 상계기사.

153) 이형신,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121.

154) 『로동신문』, 2001년 12월 21일.

또한 2000년 6.15정상회담의 말미에 남한 측은 남북간 직항로 개설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으나 김정일은 군 수뇌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2000년 9월 11일 추석 직전 김용순 대남특사와 함께 서울에 온 김정일의 측근 군 인사인 박재경 대장이 송이버섯을 우리 정부에 선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2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군 인사들이 외교부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는 힘의 과시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대외적 협상전술의 차원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군의 외교적 역할로 볼 수 있다.

3.3.2 군부의 경제적 역할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면서 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인민의 군대인 우리 군대의 본분”이라면서 군대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선군정치的重要한 특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혁명의 주력군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군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혁명의 기본전선에서 닦쳐드는 위험도 막아 나르고 제기되는 큰 일감들도 맡아 해제껴야 한다는 선군정치의 근본원리에서 비롯된 분담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민군의 경제적 역할은 당의 군대, 혁명적 군인정신의 모범자라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군정치 하에서의 군의 경제건설 역할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수행되어져온 역할이 보다 강화된 것이다. 즉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맡자”는 인민군의 전통적 구호가 군의 역할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인민군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규모 공장 및 기업소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갑문과 운수시설, 문화시설과 공장 등을 건설했다.¹⁵⁵⁾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의 경제적 활동은 오랜 전통의 하나

155) 『조선중앙방송』, 1988년 4월 23일.

였다. 북한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의욕을 상실한 일반 주민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군대가 투입됨으로써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던 것이다. 특히 지난 1980년대는 태천발전소, 금강산댐 및 발전소, 남포갑문, 순천비날론공장,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상원시멘트공장, 북부철도, 광복거리, 안골체육촌, 능라고, 능라도경기장, 원산-금강산고속도로, 평양-개성고속도로 등 대단위 건설사업에 인민군이 대거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혁명성이 높은 제대군인들을 농장, 탄광, 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여 경제건설의 성과를 높이고 여기에서 창출된 모범적인 성과를 북한 전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¹⁵⁶⁾

김일성 사후 대규모 건설현장에 군의 투입이 공식적으로 지시된 것은 1994년 11월 9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였다. 김정일은 이 명령에서 “인민무력부에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 2동굴을 당창건 50주년이 되는 1995년 10월 10일까지 건설하고 정무원에서는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 나아가 김정일은 1997년 초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대가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지을 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대규모 병력이 협동농장에 투입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주둔하면서 전 영농과정을 감독 및 통제했다고 한다.¹⁵⁷⁾

김정일은 1997년 9월 군대의 동원과 관련하여 “올해 농사 작황이 좋은 것은 인민군대가 농사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농사는 인민군대가 동원되어 지은 셈입니다. 인민군대가 아니었다면 올해 농사를 망칠 뻔 하였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¹⁵⁸⁾라고 격려하였다.

북한군은 농장뿐만 아니라 철도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철도에 대한 군의 파견은 철도연착 및 운행중단과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김정

156)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학자 연구논문 모음집』(서울 : 통일부, 2002), p. 265.

157) 『경향신문』, 1999년 5월 23일.

158) 김정일,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 가지 문제”, 『김정일 저작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p. 360.

일이 철도부에 “철도를 다루지 못하겠으면 군대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명령이 하달된 후 북한 지역의 각 철도역에는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수송 등 철도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되었다. 5~10명 규모인 각 철도역의 상주 군인들은 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과 나머지는 하전사로 구성되었다.¹⁵⁹⁾

지금까지 북한군이 일반 경제부문까지 역할을 확대해 온 것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추진된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이 심화되고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군대의 경제적 역할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군 본연의 군사업무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선군정치에서 인민군의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인민군의 사회·경제적 활동이며 이러한 역할 확장은 인민군이 당의 군대, 당의 수호자, 항일혁명전통의 계승자라는 인민군의 성격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3 군부의 사회적 역할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사회 기강이 해이되고 혁명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사회의 통제에 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군의 사회적 역할은 한 마디로 군이 당 및 인민들에게 ‘따라 배우기’의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¹⁶⁰⁾

첫째, 조선인민군이 계승하고 있는 항일유격대의 전통을 따라 배우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은 '사회의 군사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군대는 창건시기부터 이미 항일유격대의 계승자로 언급되고 그 이후 항일유격대의 사상, 투쟁방법, 생활방식의 '따라 배우기'가 대대적으로 전개됐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과거와

159) 『내외통신(주간판)』 1086호, 1999년 12월 5일.

160) 정성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조선인민군의 위상·편제·역할』 (서울: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7), p. 508.

현재의 차이가 있다면 항일유격대가 난관을 극복한 사실을 보다 부각시키고 이를 따라 배울 경우 당시 조선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민군 자체의 사업방식 및 사상 등에 대한 ‘따라 배우기’가 모범의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민군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여 전 사회적으로 따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전 사회에 군대식 규범, 군대식 조직과 규율을 요구한다든지 당 위원회의 사업 및 지도방식에 대한 따라 배우기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란 모범의 역할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이후 가속화되었다. 특히 인민군과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3년만 하더라도 「인민군대를 사회와 격리시킬 데 대하여」라는 국방위원회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사회풍’이 ‘군풍’을 흐리지 않도록 차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 후 인민군과 일반 주민의 합동행사가 사라졌고 사회와 연결된 전화도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표방 이후 인민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군의 교양학습을 넘어 사회의 당 일꾼 그리고 인민들에게 인민군의 당 정치사업 따라 배우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군이 인민 속으로 들어가 부딪히며 모범적인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난의 지속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이탈로 이어져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도덕성과 결속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혁명성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정신과 기풍, 일본새가 전국의 모범으로 되어 국가 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군대가 혁명적 군인정신의 모범자 또는 모델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⁶¹⁾ 또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투쟁 모습을 통하여서도 따라 배우고 집짐승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군인들

161)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p. 95.

의 투쟁정신을 온 사회가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⁶²⁾

김정일은 인민군이 북한 내에서 가장 조직화된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사상적으로도 우수한 조직으로 판단하고 군을 동원한 주민통제 방식으로는 먼저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대내적인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군민일치운동 전개를 통한 일반 주민과 군과의 사상적 일체화 및 군사찰기관에 주민사찰 기능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북한군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에 대한 결사옹위를 촉구하여 대내적인 결속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본다.

둘째, 군민일치운동의 적극 전개를 통한 사회 및 주민통제이다. 원래 군민일치운동은 군과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은 이 운동의 기원을 김일성이 항일빨치산시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언급한데서 찾고 있다.¹⁶³⁾

김정일은 군민일치와 관련하여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이 군대를 성심성의껏 원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일치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보도매체를 동원하여 "인민 군대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가장 투철하게 체현하면서 김정일을 제일선에서 받들고 있으며 당의 구상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상과 정신으로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무장한다면 정치·사상적 위력은 백배, 천배로 강화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⁶⁴⁾

이와 같이 군민일치운동은 인민군에 대한 주민들의 물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인민군의 사상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움으로써 군과 주민의 완전한 일체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⁵⁾

162) 김정일, "풀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나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저작집 14 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 p. 303.

163) 연합뉴스, 『북한용어 400선집』 (서울: 연합뉴스, 1999), p. 328.

164) 『로동신문』, 1998년 5월 28일.

165) 두병영, 전개논문, p. 134.

IV. 김정은 시대 통치행태 특징

고난의 행군과 대내외 악조건 하에서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을 관리해 오던 김정일이 사망한 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종 서방 언론으로부터 국가지도자로서 냉소적인 전략적 평가를 받았으나 7년이 경과한 2017년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치킨게임’¹⁶⁶⁾을 벌일 정도로 소위 ‘대담’한 정치인, 즉 북한에 최적화된 지도자로 성장하였으며, 김정일과 달리 준비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외관상으로는 현재까지 ‘핵·경제 병진노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7년 2월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현재 북한의 핵 보유는 김정일이 추구했던 선군혁명 노선 덕분”이라고 하였다.¹⁶⁷⁾ 그러나 김정일의 선군정치 기간 ‘군부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와 ‘권력집중 현상’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포기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김정은 들어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선군정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한 승리의 보검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승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김정은 시대에 표출되는 선군정치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 전에 통치방식에 투영되고 있는 김정은의 통치행태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6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8118&code=11121400&cp>, “‘욱’하는 성격의 김정은, 치킨게임 이면엔 치밀한 ‘계산’”, (국민일보, 2017.10.11.)

167) 『연합뉴스』, 2017년 2월 12일,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12일 기념보고서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시었다”며 “우리의 국방공업은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되었다.”고 밝혔다.

4.1 代를 이은 세습체제 구축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내외 언론의 관심사는 향후 권력계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국내외 각종 정보기관과 언론들은 앞 다투어 김정철 또는 김정남을 후계자로 지명하였지만 김정일의 전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만이 젊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계승자로 지목하였다.¹⁶⁸⁾

김정은은 김정일의 넷째 부인인 ‘고용희’의 차남으로 1983년 1월 8일 생¹⁶⁹⁾으로 평북 창성 태생이다. 유년시절은 이복형인 김정남과 친형인 김정철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6년 여름부터 2000년 가을까지 친형인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 베른의 공립학교에 유학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지휘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후계자 후보군 중 한명인 이복형 김정남은 10세 이후 3개월 이상 평양에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2001년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추방되며 김정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였다. 한편 친형인 김정철은 호르몬 과다 분비증을 앓았는데다 성격이 유약했으며,¹⁷⁰⁾ 2006년 독일에서 열린 팝가수 에릭클랩튼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이 일본 후지 TV에 방송되며 권력세습 후보자에서 탈락하고 만다.¹⁷¹⁾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성격과 외모를 빼닮아 어릴 적부터 김정일의 총애를 받아, 통이 큰 군인과 같은 인물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군복을 입히고 ‘대장’ 동지라 불렸으며, 식사를 할 때도 부인 고용희가 없으면 김정은을 바로 옆자리에 앉힐 정도로 편애했다고 알려지고 있다.¹⁷²⁾

168) 후지모토 겐지 저, 한유희 옮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 맥스미디어, 2010년), p. 197.

169) 김정은 출생일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김정은의 후계자 세습을 예측했던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원산초대소에서 김정일과 대화 중 12간지를 얘기하며 김정은과 자신이 같은 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 일자를 기억하고 있어 그가 기술한 1983년 1월 8일로 적용하였다. 상계서, p. 59.

17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19768>, “베일 벗는 김정은…매사 강한 승부욕 ‘김정일과 닮은꼴’”, (MK뉴스, 2011.12.21.)

171) 하태경, 『북한의 3대 세습과 왕자의 난 만화 김정은』 (서울 : 시대정신, 2011년), pp. 51 - 52.

172) 『MK 뉴스』, 상계기사.

김정일의 요리사를 지낸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김정은은 권력욕과 리더십이 남달랐으며, 강한 승부욕의 소유자, 세심한 면모와 함께 솔선수범하는 자세, 과격하고 포악한 성격 등을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시절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미국 농구에 집착하고, 여학생 앞에서 수줍음 많은 스타일, 200달러짜리 나이키 운동화 착용, 나이 많은 여학생에게 욕설 등의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는 농구와 승마, 제트스키를 즐기는 등 남성적인 면모가 강했으며 남에게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호전적인 성격이었다.”¹⁷³⁾고 전하고 있다.

[표 4-1] 공개된 김정은의 성격 종합

내 용
· 강한 승부욕과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
· 남성적인 면모가 강했으며 남에게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호전적인 성격
· 구슬게임을 하다 구슬을 놓치자 화가 나서형 정철의 얼굴을 향해 구슬을 집어 던짐.
· 강한 면모 외에 세심함도 갖추
·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선두에 서곤 했음.
· 농구 시합 후 반드시 반성회를 열어 선수 개개인에 대한 평가
· 사리판단이 분명해서 칭찬해야 할 때는 칭찬을 하고,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친다.
· ‘작은 오빠’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해서 김여정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불평함.
· 담배 끊으라는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어 거칠고 안하무인, 보통 청춘남녀 대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거칠고 가학적인 성향과 안하무인 태도
· 상대방과 통화할 때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답함.

* 후지모토 겐지,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남성욱 전 안보전략연구원장, “10대 시절 김정은”(2017.9.1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위 [표 4-1]에서 보는 김정은은 권위주의적 폭력적인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보유한 지도자로 평가되며 이복형인 김정남이나 친형인 김정철 보다 폐쇄적인 북한사회 독재자로서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된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 작업은 공교롭게도 2008년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 증세로 쓰러지면서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생일 60주년을 전후하여 후계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과는 달리 김정일은 자신의 생일 60주년인 2002년에도 후계자 구축에 그다지

173) 후지모토 겐지 저, 전게서, pp. 127 - 147.

적극적이지 않았다.¹⁷⁴⁾

자신의 난잡한 여자관계와 결혼생활¹⁷⁵⁾, 서자(庶子)와 같은 김정은의 출생 비밀, 생모가 재일교포 북송가족 출신인데다 무용수라는 사실¹⁷⁶⁾은 김정일이 ‘백두혈통’을 자처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순탄하게 권력을 인수받은 것과는 달리 권력세습의 ‘정당성’에 크게 미달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후계자 없이 자신의 유고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과거 중국의 모택동 사례를 통해 명백하게 인식하였을 것이었다.

김정일이 뇌졸중 투병에서 복귀한 2009년 1월부터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총정치국 대좌급 이상 간부에게 김정은의 후계자 확정 사실을 지시하는 김정일 교시가 하달되었고 6월 말까지 모든 주민에게 김정은의 후계자 지정 사실이 통보되었다.¹⁷⁷⁾ 한편 2009년 2월경부터는 군부 엘리트가 ‘김정은의 인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의 후견인인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리영호(총참모장), 그리고 김정일의 오랜 측근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북한군 수뇌부를 이끌며 김정은 시대를 준비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김정은은 중앙당 당조직지도부¹⁷⁸⁾에서 후계체제 구축을 시작하며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경에는 외교 부문을 제외하고는 김정일과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에 도달하였다.¹⁷⁹⁾

174) 차성근, 전계논문, pp. 89 - 90.

175) 차성근, 상계논문, p. 89.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세 번째 부인인 김영숙과는 공식 결혼을 하였으나 나머지 3명과는 동거를 하는 수준이었음. 김정은의 생모는 4번째 부인으로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인 ‘고용희’였음”

176) <http://news.joins.com/article/12296752>, “북한 김일성, 기쁨조 출신이며 부친 일본군협력자 고경택 이 유로 고영희 아들 김정은 손자로 인정 안했다”, (2012.2.15.),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2004년 사망)는 재일교포 북송가족으로 그의 외조부 고경택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근무한 일본군 협력자였으며, 고용희는 기쁨조 출신이었다. 김일성은 생전에 고용희의 출신성분과 고경택의 과거 전력 때문에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3.8.9.)

17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19768>, “베일 벗는 김정은…매사 강한 승부욕 '김정일과 닮은꼴'”, (매일경제, 2011.12.21.)

178) 차성근, 전계논문, p. 91.

179) 『매일경제』, 상계기사.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에도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김정일 시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150일 전투’(2009년 4월 20일 ~ 9월 16일), ‘100일 전투’(9월 23일 ~ 12월 31일) 등 2차례 ‘경제전투’와 대동강변 ‘축포야회’(2009년 4월 15일), ‘화폐개혁’(2011년), 그리고 대한민국 영해와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인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16일) 등을 자행하면서 북한주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1966년 이후 44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대표자회(2010년 9월)를 통해 권력지도를 통째로 바꾸며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예고하였다. 노동당 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당 인사개편을 단행하여 위원들의 사망이나 고령에 따른 결원을 대거 보충하였는데 중앙위원 124명, 후보위원 105명을 결정했다.¹⁸⁰⁾ 同 기간 중 김정은은 당내 후계자 지명 1년 9개월 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대외적으로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하였다.¹⁸¹⁾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고 13일 만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김정은의 공식적 후계세습은 본격화되어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 되는 해에 노동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고 자신의 포병술 교관이었던 총참모장 리영호를 숙청한 다음날인 2012년 7월 17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면서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을 마무리 지었다. 김정은은 후계세습 마무리 1년 5개월 후인 2013년 12월 12일 3대 세습체제 구축의 가장 큰 공신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란 죄목으로 즉결 판결 후 총살하였고, 이어 추종세력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고도 전격적인 숙청조치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¹⁸²⁾

180) 『SBS 뉴스』, “북한 3대 세습후계자 김정은”, 2010년 10월 8일.

181) 차성근, 전계논문, p. 92.

182) 상계논문, pp. 92 - 93.

4.2 당-군 관계 재설정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핵심은 과거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군부의 수뇌인 ‘국방위원장’으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시키고 군부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하여 최고지도자와 노동당, 그리고 군부를 일체화 하였으며, 당과 군이 단일한 인력의 교류나 공유의 차원을 넘어 정책 성향과 이념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당·군 합일체제’를 추구하였다.¹⁸³⁾

그러나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 투병 이후 후계자 선정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그동안 김정일의 측근에서 충성스럽게 보좌해 왔던 거대한 권력집단인 군부는 김정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군부의 영향력 비대화를 우려한 김정일이 “선군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¹⁸⁴⁾고 판단하면서 통치 주체로 군부가 아닌 노동당을 택하면서 선군정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후계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2009년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노동당의 조직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 이후 44년, 제6차 당대회가 열린지 30년 만에 제3차 당대표자회가 열렸는데 주요 안건은 ①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재추대 건 ②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건 ③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세 가지로 모두 일사천리로 하루만에 처리되었다.¹⁸⁵⁾ 이 안건들은 공통적으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장기간 방치되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하여 김정일 중심의 ‘영도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 조직의 핵심인 사람문제는 당 정치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27명이 증가했으며, 비서국은 9명,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3명, 당중앙검사위원회는 9명이 증가하여 선당정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선군정치의 통치이념이었던 선군사상은 2012년 4월 11일 당규약에서

183) 차두현, 전계논문, pp. 127 - 128.

184) 김동엽, “김정은 리더십 안정적으로 구축돼”, 민화협 통일정책포럼(2016.12.8.)

185) 『통일뉴스』, “北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어떻게 볼까?”, (2010.9.3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¹⁸⁶⁾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김정은 시대 새로운 통치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되어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 ‘선군’은 과거시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정은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사를 보면 ‘선군’의 비중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아래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해가 갈수록 선군의 언급 횟수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2013년 8월 노동신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¹⁸⁷⁾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총화에서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의 기치 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고 하며 선군정치와 주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데, 즉 주체없는 선군, 수령의 영도가 배제된 선군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원기제로서 군의 역할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군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¹⁸⁸⁾

[표 4-2] 김정은 신년사에서 ‘선군’ 언급 횟수

구분	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수)	46	7	14	17	6	3	3	2	1

* 노동신문 발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정리

김정은의 선당정치는 전시사업세칙 및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개정, 통치조직 정비, 그리고 군부 엘리트의 정치 참여도 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시사업세칙¹⁸⁹⁾은 2004년 작성하여 김정은 출범에 맞추어 수정하면서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제의 결정자를 ‘수령’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꾸고 선포시기도 새로 명시했다. 특히 세칙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당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는데 전시상태의 선포 권한을

186) 『조선로동당 규약』, 2012년 4월 11일.

187) 『노동신문』, 2013년 8월 12일.

188) 차두현,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6.5.19)

189) 『naver 지식백과』, “전시 사업세칙은 북한의 전시상태 선포와 전시 지휘체통을 명문화한 것으로 당, 군과 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을 말한다”

종전 ‘최고사령관’이라는 최고지도자 개인의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 명령’으로 수정됐다. 또한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을 종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집중한다고 변경했다. 과거 군부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무모한 도발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군이 아닌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통치 운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¹⁹⁰⁾

여기에는 2013년 6월에는 북한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규범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¹⁹¹⁾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일성 주석과 동급으로 격상하고 수령뿐 아니라 노동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했다.¹⁹²⁾

북한은 10조 65항으로 구성되었던 유일사상 10대원칙을 2013년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고 김정일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면서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 3조에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해야 한다”거나 제4조에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기존 제4조 8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를 제 4조 7항의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로 바꿔 수령에 대한 언급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당으

190) 장용훈,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32호』 (서울: 코리아연구원, 2013.8.29.)

19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지식사전』, pp. 456 - 457, “김정일은 1974년 4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기본내용은 ①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②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심, ③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④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⑤ 김일성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준수, ⑥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 ⑦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 ⑧ 김일성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 ⑨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 확립, ⑩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야 한다.”이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2012>, (대한민국 안보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2013. 8.16.), “10대원칙은 김일성 일가의 절대적 권위와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지배질서를 제한한다”

192) 장용훈, 상계논문.

로 대체하였다. 제9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는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로 바뀌었고 간부 선발 척도로 명시했던 제9조 7항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간부들이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에 반대”하며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간부들의 ‘세도’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2013년 12월 8일 당정치국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체포하는 결정서 내용에 위 내용이 기술된 것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이 권력의 핵심인물들이 자신들의 직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세도를 부리는 현상을 권력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 들어 수령 대신 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이라는 정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 사회를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하였던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하기 시작했으며 당 정치국 회의 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국가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11년 12월 30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 구호를 심의했으며, 2012년 7월에는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전 총참모장 이영호를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는 결정서를,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당위원장에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당-군 관계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당의 군 통제’라는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방만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었고 비대해진 권력의 중심이었던 군부를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4.3 군부 공포통치 강화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을 김정일과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승계의 속도와 압축성으로 볼 수 있다.¹⁹³⁾ 아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은 1974년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1980년 당 정치국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공식적 후계자로 공표되었으나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1월 이후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약 20개월 만에 후계자로 공표되어, 김정일의 80개월에 비해 약 4배가 빨랐으며, 김정일이 당시 38세인데 비해 김정은은 27세로 무려 11년이나 빨랐다.

[표 4-3] 김정일, 김정은 권력세습 비교

김정일			김정은		
1964년	당조직지도부지도원				
1972년	당중앙위원회위원	8년			
1973년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	9년(1년)			
'74.2월	당 정치국위원	10년(1년)			
'80.10월	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군사위원	16년(6년)			
1982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8년(2년)			
1991년	최고사령관	27년(9년)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29년(2년)			
1994년	김일성 사망				
1997년	조선노동당 총비서	33년(4년)	1년	'10.9월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11년	사망		2년(1년)	2011년	최고사령관
			3년(1년)	2012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
				2012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조선노동당 제1비서
				2012년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5년(2년)	2014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7년(2년)	2016년	조선노동당 위원장

* naver 인물검색 ; 통일부 교육연구원,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3년) 기초로 연구자가 재정리

한편 김정일의 경우 20년 가까이 지도자 수업 이후 3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당·정·군을 장악하여 리더십을 확고히 했으나, 이에

193) 이무철,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12). p. 31.

비해 김정은은 약 20개월에 불과한 지도자 수업 이후 4개월 만에 권력을 승계함에 따라 취약한 권력기반을 조기에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공포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3대 세습과정에서 ‘권력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가 요구되었는데¹⁹⁴⁾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대체할 지배이데올로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백두혈통’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워 승계를 정당화 했다. 또한 ‘승계의 제도화’를 위해 지도자의 지지기반이 필요하였는데 김정일은 후계자 내정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만들었으나, 김정은은 2009년 1월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인해 김정일이 구축해 둔 후견세력에 의존해야 했다. 이들 후견세력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유산들로 비대해진 군부와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로 당·국가 체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었고 이에 따라 김정은은 권력층의 실세를 비롯한 불만세력들에 대한 ‘공포통치’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착수해 나갔다.¹⁹⁵⁾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과거 김일성·김정일과 다른 점은 방법 면에서는 ‘가학성’, 대상 면에서는 ‘혈연’이나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가학성’을 보면 고위직 처벌 시 박격포 또는 고사총으로 총살하였고,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시에는 고문으로 피폐해진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유헌에서 배려하고 애로를 덜어주라고 당부했던¹⁹⁶⁾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화학무기를 이용해서 대낮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항에서 암살하였고, 미국 관광객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감금 또는 납치하여 고문을 가하였는데 미국인 월비어의 경우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계기로 최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월비어 제재법’¹⁹⁷⁾을 제정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194) 이무철, 전계서, p. 32.

195) 이무철, 전계서, p. 34.

19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215000125>, “김정일 유서 장남 김정남 언급”, (부산일보, 2017.2.15.)

19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5/0200000000AKR20171025007851071.HTML?input=1195m>, “오토 월비어 이름을 딴 대북 초강력 금융제재법 미 하원 본회의서 처리”, (연합뉴스, 2017.10.25.)

럼 김정은은 김정일이 당부했던 이복형이며 백두혈통인 김정남은 물론이고 적대국에 대해서도 자신의 가학적인 ‘공포통치’를 확대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¹⁹⁸⁾

과거 김일성은 집권 후 반대파 70만 여명을 숙청하여 수만 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영원히 감금시켰으며¹⁹⁹⁾, 김정일은 1993년도 ‘프룬제 군관학교 반란사건’과 1995년 ‘6군단 쿠데타 사건’을 통해 수백 명의 군인들을 처형하였다.²⁰⁰⁾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의 원한이 점증하자 노동당 농업담당비서인 ‘서관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심화조 사건’을 일으켜 1만 2천여 명을 숙청하였다. 이처럼 독재집단인 북한에서는 공포통치와 피의 숙청은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은 이러한 ‘공포통치’를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당적 통제 강화의 걸림돌 제거, 충성경쟁 유도 등의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⁰¹⁾

먼저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걸림돌 제거는 후계자 승계 기간 중 후견인 역할을 했던 당 행정부장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2013년 12월 8일 사형 결정 후 12월 12일 처형하였는데, 노동신문에서는 “최근 당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세하려 들면서 분파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 나서는 위험천만한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²⁰²⁾고 보도하였다. 이 밖에 노동신문이 밝힌 장성택의 죄는 ‘장성택 우상화 시도’, 직권남용, 토지를 외국에 파는 매국행위, 부정부패 등이다.²⁰³⁾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6월에 김정은은 기존의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개정하였는데 제6조 5항에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 먹는 종파

19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2301071327216002>, “북 주민 수십만 명 재판없이 구금 처형”, (문화일보, 2017.2.28.)

199) 하태경, 전계서, p. 134.

200)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458§ion=sc6,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사건”, (통일신문, 2017.10.26.)

201) 이무철, 전계서, pp. 30 - 60.

202)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203) 이무철, 상계서, pp. 42 - 43.

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 위하는 현상을 반대하며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명시하였다. 2013년 12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출당·제명키로 결정하면서 장성택을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영도사상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제6조 5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²⁰⁴⁾

김정은이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고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장성택의 월권문제가 장기간 누적되었고, 이에 김정은의 친위세력 즉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직지도부의 주도면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장성택을 비롯한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등 측근 16명²⁰⁵⁾을 전원 처형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을 따라다니던 후견인 또는 조연자 등 제2인자가 사라지면서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과 함께 2010년 당대표자회의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며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前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은 2015년 최고존엄 모독죄로 처형되었으며²⁰⁶⁾, 이복형인 김정남도 2017년 암살되었는데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에 걸림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정은의 무자비한 처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당적통제 강화의 걸림돌 제거 측면에서는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 따라 비대해진 군부의 각종 이권개입 및 정치관여를 배제하고 당 중심의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복원하려는 김정은의 시도에 반기를 든 총참모장 이영호가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다. 이영호는 선군정치 시기 군부가 누렸던 각종 이권을 내각으로 전환하려는 장성택 주도의 당행정부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숙청되었다. 이영호 숙청으로 군부의 영향력 약화와 함

204) 이무철, “김정은 체제의 북한 : 평가 및 전망”, 『한반도 정세 : 2013년 평가와 2014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한반도리포트 2013 / 2014 제4호, 2013.12월)

205) <http://www.sedaily.com/NewsView/1HNCOAWL6H>, “장성택 처형 및 측근 16명 전원처형”, (서울경제, 2014.1.31.)

206)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579>, “현영철은 ‘최고 존엄 모독죄’로 처형”, (코나스넷, 2015.5.15.)

게 당의 기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당적통제와 함께 당·국가체제가 정상화되어 나갔으며, 당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려는 김정은의 복안대로 당료들이 대거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세 번째, 폐쇄되고 경직된 사회인 북한에서 경험이 일천한 어린 독재자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에 길들여진 중·장년층을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모든 삶을 의탁하기 위한 충성경쟁을 유도하도록 강력한 추동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충성경쟁은 나이와 직위를 막론하고 해당되었는데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들어 2월 ‘인민군 군인들의 명포수상 경기대회’, 3월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군중, 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4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5월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7월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 등의 각종 경연대회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육·해·공군 고위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것이 특징인데 지휘성원들은 대대장급(중령) 이상 고위직으로 이들이 나이 어린 김정은 앞에서 앞드려 사격을 하고,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수영을 하는 등 육체적인 수모에 가까운 경연대회를 연출하였는데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러한 경연대회는 2015년에도 이어졌으나 2014년에 지휘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2015년부터는 병종별로 사격경기 대회 또는 비행경연대회가 이어졌다.

또한 군부엘리트들에 대한 계급 강등·복권으로 어느 한순간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부엘리트들의 힘 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군부에서 고위층은 대부분 강등을 경험했을 정도인데 아래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부엘리트 9명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 강등·복권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32회의 강등과 복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개인별로 3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포병국장 박정천의 경우는 7차례나 강등과 복권을 경험할 정도였다. 최측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와 인민부안부장 최부일

도 3~4회의 강등과 복권을 경험했다.

[표 4-4] 군부 엘리트 계급 강등·복권 현황

구 분	세부 현황
김격식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대장('97년) → 상장('11년) → 대장('12년) 2회
현영철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대장('10.9월) → 차수('12.7월) → 대장('12.10월) → 상장('13.6월) → 대장('14.6월), 4회
김영철(총정찰국장)	대장('12.2월) → 중장('12.11월) → 대장('13.2월), 2회
최용해(총정치국장)	대장('10.9월) → 차수('12.4월) → 대장('12.12월) → 차수('13.2월), 3회
최부일 (인민보안상)	대장('10.9월) → 상장('13.5월) → 대장('13.6월) → 소장('14.12월) → 대장('15.10월), 4회
박정천 (포병국장)	중장 → 상장('13.4월) → 중장('14.4월) → 상장('14.5월) → 소장('15.3월) → 대좌('15.8월) → 중장('16.3월) → 소장('16.11월), 7회
염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상장 → 소장('14.2월) → 중장('14.7월) → 상장('17.4월), 3회
장정남(인민무력부장)	중장 → 상장('13.5월) → 대장('14.1월) → 상장('14.2월) → 대장('14.3월), 4회
이영길(총참모장)	상장('12년) → 대장('15.3월) → 상장('16.3월) → 대장('17.4월), 3회

* naver 인물검색,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부”, 『통일시대 109호』,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년)를 기초로 연구자가 정리

강등·복권과 함께 주요 직위자 수시교체는 김정은의 독특한 인사행태로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정치국장 등 군부의 핵심 6개 직위를 대상으로 보면, 가장 변화가 적은 총정치국장은 1980년대 이후 2012년까지 32년간 3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 5년간 2명이나 교체되었다.

또한 총참모장의 경우 20년 동안 4명이었으나 5년간 4명으로 인원 변동폭이 4배나 차이가 나며, 작전국장의 경우 15년간 4명이었으나 5년간 5명이나 교체되는 등 김정은 집권 전후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 군부 주요직위자 교체 현황

구분	김정은 집권 이전	김정은 집권 이후
총정치국장	오진우('80년) → 조명록('95년) → 김정각('10년~'12년 4월)	최룡해('12.4월) → 황병서('14.5월~현재)
총참모장	최광('88년) → 김영춘('95년) → 김격식('07년) → 이영호('09년~)	이영호(~ '12년 7월) → 현영철('12년 7월) → 김격식('13년 5월) → 이영길('13년 8월) → 이명수('16년 2월~현재)
인민무력상	오진우('76년) → 최광('95년) → 김일철('98년) → 김영춘('95년 2월~)	김영춘(~ '12년 4월) → 장정남('13년 5월) → 현영철('14년 6월) → 박영식('15년 5월~ 현재)
작전총국장	이창진('92년) → 이명수('96년) → 김	김명국(~ '12년 4월) → 최부일('12년 4

	명국('07년 ~)	월)→이영길('13년 2월)→변인선('13년 8월)→김춘삼('15년 1월)→이영길('16년 5월)
보위국장	원웅희('92년)→김원홍('03년)→조경철('09년 ~ 현재)	
국가보위상		김원홍('12년 4월)→정경택('17년) ²⁰⁷⁾

* naver 인물검색 ;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년) ; 김진무, “김정은 집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제158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2015.9.21.)를 기초로 연구자가 정리

김정은의 집권 첫 해인 2012년에는 군 수뇌부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하였다. 이는 강등·복권과 유사하게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상벌의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절대충성을 유도할 수 있으나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체제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탈북한 태영호 前 주영 북한공사는 “충성을 다하는 측근들도 이유 아닌 이유로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행태를 보면서 점점 절망감에 빠져 들었습니다.”라고 하며 “공포정치에 환멸을 느껴 탈북을 했다”²⁰⁸⁾고 진술하며 남한에 망명하게 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4.4 핵·미사일 개발 주력

김정은은 집권 1년차인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공표하고 헌법 서문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²⁰⁹⁾라며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핵 보유국도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는데 북한의 이러한 어처구니

207) 『연합뉴스』, 2017년 10월 10일

20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90190.html, “태영호, 핵질주·공포정치 환멸 느껴 탈북”, (TV조선, 2016.12.27.)

209) 『북한 헌법』 (2012년 개정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숙한 지도자의 허세 또는 외교협상 수단으로만 평가절하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관하면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으로 평가 절하하였으나 김일성과 달리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는 2017년 10월 5일 “김정은은 광적인 선동가라기보다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성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하였는데, 재래식 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군사적 문제를 대량살상무기(WMD)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²¹⁰⁾

경제성고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전력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Option은 비대칭전력 증강이 유일한 해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2017년 10월 7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고 강조한 후, 같은 해 11월 29일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 후 중대방송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며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사실상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취약한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전략무기 개발에서도 찾고 있는데, “핵과 장거리미사일·생화학 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게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²¹¹⁾이라는 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고도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일과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

210)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20246616090624&mediaCodeNo=257&OutLnkChk=Y, “북 핵·미사일,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차이점 4가지”, (이데일리, 2017.10.7.)

211) 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00, “김정일 유서 극비리 입수”, (2012.4.14.)

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김정일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장거리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를 장거리미사일이라 칭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미사일은 로켓에 탄두 또는 위성을 탑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당시 국제해사기구(IMD) 등 국제기구에 발사체 계획을 통보하며 ‘눈치’를 보기도 했다.²¹²⁾ 그러나 2017년 7월부터는 장거리미사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7월 4일 ‘화성-14형’ 발사 직후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을 안길 것”²¹³⁾이라고 하였고 ‘화성-12형’ 발사 직후에는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트 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미사일)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²¹⁴⁾고 강조하면서 이를 북·미간의 문제로 국한시켜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핵실험과 같은 전략도발은 김정일 집권 시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2회에 불과하였으나 김정은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벌써 4번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당시에는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과시하였다.²¹⁵⁾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대화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 1994년 10월 미국과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한 이후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취했다. 2002년 미 부시 행정부 들어 다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수로 제공 등의 합의가 중단되었지만 이후에도 6자회담 테이블은 유효했고, 또한 미·북간 민·관 투트랙은 상호간 비밀접촉의 통로였다. 이러한

21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20246616090624&mediaCodeNo=257&OutLnkChk=Y, “북 핵·미사일,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차이점 4가지”, (이데일리, 2017.10.7.)

213)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9일.

214) 『조선중앙통신』, 2017년 8월 30일.

21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20246616090624&mediaCodeNo=257&OutLnkChk=Y, “북 핵·미사일,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차이점 4가지”, (이데일리, 2017.10.7.)

상황관리를 통해金正일은 9.19 공동성명, 2.13합의 등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金正일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대화제외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갈길 간다(My Way)’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金正일의 핵·미사일 집착 전략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축출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김씨 일가 정권유지와 체제결속, 대남위협 및 공격수단, 대미협상력 제고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노망난 늙은이(Dotard)’와 ‘로켓맨(Rocket Man)’ 즉 트럼프와金正일간 말폭탄은 과거 전략적 인내로 외면 받았던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협상력 제고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金正일은 선(先)대에서 이루지 못 했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2017년 12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군수공업대회에서 ‘화성-15형’ 미사일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자평하며²¹⁶⁾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민족사적인 대승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사변”²¹⁷⁾이라고 주장하였다.

올해 들어 북한은 기존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대체하는 ‘화성-12형’을 선보이면서 6번의 시험발사에서 차례로 비행거리를 늘려가며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7년 7월 4일, 7월 28일 ‘화성-14형’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인 후 11월 29일 ‘화성-14형’을 개량한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는데, 우리 국방부가 12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북한 화성-15형은 비행특성과 속도, 각단의 분리, 외형 등을 고려할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16) <http://www.sedaily.com/NewsView/1OOTSM4YS5>, “金正은 북, 군수공업대회서 ”화성 15형 도약대 삼아 핵무력강화“, (서울경제, 2017.12.12.)

217) 『조선중앙통신』, 2017년 12월 12일.

(ICBM)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²¹⁸⁾

세 번째, 김정은 시대의 탄도미사일은 기습공격이 가능하도록 더 은밀해지고 고도화되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 추진체계는 액체 연료 기반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을 선보였다. 이른바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이다.

산화제로 독성이 강한 질산을 사용하는 액체 추진시스템은 취급이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 액체 추진제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발사 전 추진제 충전시 장시간이 소요된다. 연료 주입후 일주일 이내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고체 추진시스템은 연료를 충전한 상태로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연료주입 시간도 액체 추진시스템에 비해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에 위성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은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여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에 탑재하고 있다. 콜드런치는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발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 쏘아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비행시키는 방식이다.²¹⁹⁾ 일정 부분 비행 후 위성과 레이더에 탐지되기 때문에 발사위치 은폐에 매우 유리하다. 이와 같은 기술이 모두 적용된 SLBM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여 기지를 이탈한 후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기술 개선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TEL은 바퀴가 달린 차륜형에 더해 궤도형까지 갖췄다. 차륜형은 평지나 도로 등을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유리하지만 산악지형 등의 험지에서는 제한적인데 반해 궤도형은 기동속도는 떨어지나 지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 산악지형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경우 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적어지며 탑재중량 또한 차륜형보다 더 크다.

218)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62615>, “북 화성-15형 1단 로켓에 숨겨진 비밀”, (뉴데일리, 2017.12.2.)

219) <http://news1.kr/articles/?3001454>, “일, 北미사일 콜드런치 기술 성공 첫 공식 언급”, (뉴스1, 2017.5.23.)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총 900여발로 이를 탑재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는 110여기에 달한다. 이중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스커드미사일은 최대 430여발로 이를 위한 이동식발사대는 40여기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는 비대칭 전략무기 운용부대인 북한 전략군의 위상강화도 눈에 띈다. 전략군은 모체부대는 육군 예하 미사일지도국이었으며 우리의 군단에 해당되는 규모로 판단하고 있었다.²²⁰⁾ 그러나 김정은이 2012년 3월 3일 전략로켓사령부를 현지지도하면서 조직이 육군 예하 전략로켓사령부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3년 3월 5일에는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인 ‘KR-FE 연습’을 비난하였는데, 육군 예하 전략로켓사령부가 육·해·공군과 동일한 전략군으로 승격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정은은 전략군 창설일인 1999년 7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략군절’을 제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전략군의 사령관은 김락겸으로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후 김정은의 실무측근 그룹²²¹⁾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10일 김락겸이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 4발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을 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2017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의 전략군사령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전략군사령부의 내·외부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였는데 당시 보도에서 전략군사령부 지휘소 내부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전략군이 운용하는 탄도미사일의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타격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을 공개하며 허언에 그친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으로 미국을 압박하였다.

한편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2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9956&ref=A>, “北, 만 명 규모 핵 전략군 신설 운영”, (KBS 뉴스, 2017.1.12.)

221) 김진무, “김정은 정권 엘리트변화 분석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제 1584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p. 9.

의 핵개발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군이 아닌 당 군수공업부 인물들로 당 군수담당 위원장인 리만건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홍승무²²²⁾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중앙 TV에서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의 손을 꼭 잡고 공연장에 입장했고, 공연을 마치고는 홍 부부장, 이홍섭 핵무기연구소장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 등 핵 개발 과학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 포착된 바 있다. 또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차수)가 상장(별 3개)인 이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에게 깍듯하게 거수경례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²²³⁾ 김정은의 최대 숙원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당 군수공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선군정치의 산물이 아닌 선당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4.5 용군정치 하 체제결속 차원 현지도

4.5.1 용군정치 개념 정립

북한 사회에서 독재자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통치 리더십을 발휘하였는데 김일성은 중·소 갈등 분쟁에서 주체사상을, 김정일은 국제적 고립과 최악의 경제난 상황에서 선군사상을 내세워 체제를 통제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였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神적인 카리스마의 존재인 김일성과 백두혈통의 김정은이 가지는 정통성을 보완하는 것이 독재자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의 결합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당규약 첫 번째 구절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로 출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자리매김해 놓았다.

한편 1997년부터 선군정치가 제기되면서 군부 세력은 군사 선행의 원

222) 『연합뉴스』, 2017년 9월 10일.

223) <http://news.joins.com/article/21923318>, “김정은, 핵개발자 팔짱 끼고 격려 … 황병서는 별셋 핵연구소장에 경례”, (중앙일보, 2017.9.11.)

칙에 따라 정치참여와 각종 경제적 이권 개입 등으로 부정부패와 만연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김정일도 부담스러워 한 북한 군부의 권력 비대화는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에게는 권력투쟁의 대상이었고 언제라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독재자 김정은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걸림돌이 된 군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군부 힘빼기’, ‘군부 공포통치’ 등으로 길들여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는 더 이상 선군정치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김정은은 ‘선군’이 아닌 ‘선당’으로 노동당을 통한 통치체제를 정착화하면서 당 중심의 의사결정기구와 정책집행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선경’, ‘선핵’을 강조하며 핵위협을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김정은의 국가운영 통치 복안에서 ‘선군’은 우선순위가 크게 떨어지는데, 병영국가이면서 총과 칼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북한체제 특성상 군부를 소외시킬 수 없지만 군부의 권력비대도 동시에 견제해야 할 입장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의 군부통치는 ‘선군’과 같은 국가운영의 최상위 전략개념이 아니고 김정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용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결국 ‘용군’이란 정상적인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군부를 통제하는 방식이며 철저하게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통치방식인 것이다.

4.5.2 체제결속 차원의 군부대 방문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스위스 유학경험과 함께 IT세대의 지도자로, 현지도도간 대내외 매체 즉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정치’²²⁴⁾로 대내외에 자신의 의도를 공개하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첫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는 정통성 있

224)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y-07282017090047.html, “재입북자 활용하는 김정은의 미디어 정치”, (RFA, 2017.7.28.)

는 후계자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하여 선군정치의 효시인 류경수 근위부대를 방문하였다. 조선신보는 김정은의 류경수 근위부대 방문을 ‘선군의 정치 방식을 계승하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미디어 정치’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취약한 군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도 중 집권 첫해인 2012년 현황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한 지도자로 군부대 현지지도를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였는데, 마치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예하 부대를 순시하듯 육·해·공군 주요 부대를 꾸준히 방문하였다. 2012년 1월 1일 근위부대를 시작으로 4월 김일성 생일 100주기 행사 직전까지 4월까지 약 24회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전체 현지도 횡수 44회를 고려해 볼 때 약 5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군부대 현지도에 애착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2년 4월까지 군부대를 현지도하면서 과거 김정일이 방문했던 인연을 언급하고, 군부대의 정치사상 강화와 부대 본연의 임무인 전쟁준비와 전투력강화 과업을 강조하였는데, 2012년 3월 3일 전략로켓트 사령부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은 1974년 8월,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3월 이 부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보도하였고, 김정은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하는 군대에게 있어 싸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화력 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라”²²⁵⁾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군부대 애착은 2012년 7월 15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정서를 발표하면서 일대 전환을 맞는다.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기반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휘철학을 주입하기 위해 분주히 방문했지만 김정일 시대 인물인 리영호 숙청 이후에는 자신의 지지 세력들로 교체하면서 권력장악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군부대 방문 횡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선군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225)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3일.

여겼던 군부에게는 과거와의 단절을 예고하는 징후로 여겨졌을 것이다.

2012년 전반기 4월 7일 이후부터는 김일성 생일 행사와 6월 25일 및 7월 27일 계기 각종 정치행사와 건설현장 확인으로 분주하면서 군부대는 1회(5월 24일 남포일대 1501군부대)만 방문하였으나 7월 15일 이후 2012년 말까지 군부대 방문은 8회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67회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반기 약 4개월간 24회의 군부대 방문(전체 대비 55%)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즉 김정은은 취약한 군부권력을 친위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히 군부대를 방문하였고 전 총참모장 리영호 숙청 이후 자신의 세력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난 이후 군부대 방문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즉 김정은은 현지지도간 미디어 정치를 통해 군부를 친위세력화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1월 1일 류경수 근위부대를 방문하면서 ‘선군정치’를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은 선당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통치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선군사상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갈아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김정은의 노력은 전 총참모장 리영호 숙청과 함께 본격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의 현지지도 동향 중 군부대 방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부문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17일 기준 현지지도 동향을 보면 75회 중 절반에 가까운 37회(49.3%)를 군부대 현지지도에 할애하고 있는데 선군의 부활이라기보다는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가 있었던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93일 동안 경제 분야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이전에도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때는 공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올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올인한 결과인 것 같다.”²²⁶⁾고 언급하였는데, ‘선군사상’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긴장정세가 장기화 되며 의도적으로 핵·미사

226) <http://news.joins.com/article/22023255>, “김정은 올해 절반은 군대에 갔다”, (중앙일보, 2017.10.18.)

일 발사 관련 군부대 및 시설 방문을 비롯하여 관련자 격려 등의 행사에 32회를 할애하고 있어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4-6] 김정은 집권 이후 현지도 동향

2017.10.17일 기준

연도	총계	군		경제		정치		사회문화		대외·기타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12년	151회	49	32.4	37	24.5	29	19.2	33	21.8	3	1.9
'13년	212회	62	29.2	74	34.9	26	12.2	46	21.7	4	1.8
'14년	172회	56	32.5	62	36	24	13.9	29	16.8	1	0.5
'15년	153회	46	30.1	70	45.8	19	12.4	10	6.5	8	5.2
'16년	133회	47	35.3	50	37.6	27	20.3	7	5.2	2	1.5
'17년	75회	37	49.3	17	22.7	12	16	8	10.7	1	1.3
합계	896회	299(33.4%)		308(34.4%)		137(15.3%)		133(14.8%)		19(2.1%)	

* 출처 : 『중앙일보』 (2017.10.18.)

결국 김정은은 집권 초기 취약한 군부의 권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선군’을 빙자한 군부대 방문을 활발히 하였으나 군부장악에 걸림돌인 리영호 숙청 이후에는 대남·대미 긴장조성과 내부 체제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용군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 특성상 주민동원이 제한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부는 김정은의 각종 건설사업과 체제정비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이며 대남·대미 긴장조성을 통해 체제결속을 유도하는 체제의 특성상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할 무장 세력인 동시에 또한 체제이탈과 사상이 완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친위세력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 비대해진 군부의 권한을 제어하고 비정상적인 경제개입 활동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김정은의 통치술이 ‘용군(用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2011년 집권 이후 북한을 통치하면서 보여준 중요 특징 중대를 이은 권력세습, 당-군 관계 재설정, 군부 공포통치 강화, 핵·미사일 개발 주력, 용군정치 하 체제결속 차원의 현지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11일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

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이고, 주체시대·선군시대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시대적 요구’²²⁷⁾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이후 5년간의 권력공고화 기간을 거쳐 2016년 5월 6~9일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판 주체사상²²⁸⁾으로 승격화 하면서 선군사상의 위상을 수령의 영도 통치를 받는 선군, 김일성-김정일주의 하위 개념의 선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김정은이 선군의 위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채택하면서 선군의 위상도 과거 김정일을 호위했던 주요 인물의 쇠락과 병행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이 2009년 후계자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습 및 권력장악 과정에서 표출되기 시작한 각종 통치행태에서 선군정치의 역할과 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은 선대의 선군정치를 선당용군(先黨用軍)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 하면서 유일사상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선군정치 역할과 위상 변화

구 분	주요 내용
후계세습	· 2009년 헌법 개정시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동급으로 규정 ·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당 기구 중심 통치력 보강 ※ 선당정치로 복원 신호탄
당·군관계	· 총정치국장에 조직지도부 당료 출신 임명 · 군의 경제활동 축소 등 이권개입 차단, 군 본연의 전투준비 지시 · 각종 국가건설 사업에 군 참여 지속 ※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강화
공포정치	· 前 총참모장 이영호 등 고위엘리트 숙청인사 대부분이 군부엘리트 ²²⁹⁾ · 고위 장성 계급 강등(32회) 및 복권을 통해 충성경쟁 유도 · 총참모장 등 핵심직위 수시 교체를 통해 군부 군기잡기 병행 ※ 군부 권력집중 차단 및 힘빼기를 통한 용군정치 기반 강화
핵·미사일 정책	· 당 군수공업부 중심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 당 주도하 김정은 정권 최대 숙원인 핵우선 전략 수행
현지지도	· 경제에 방점을 둔 현지지도, 긴장고조 필요시 군부대 집중 방문 ※ 용군정치 하 현지지도

* 연구자가 재정리

227)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권 3호』 (서울: 한국정치연구원, 2013년), p. 187.

228) 차두현,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 1.

229) 김태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5.10월), p. 52.

V.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 전망

북한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온 다수의 탈북자들에 의하면 현재 김정은 체제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체제가 3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016년 16.7%에서 2017년에는 28.2%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북한에 있을 때 본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직무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9.7%에 달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이는 “김정은이 여러 대내외적 악재에도 경제성장을 거두고 핵무장을 계속하는 등 체제유지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²³⁰⁾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자신하며 초강대국 미국을 대상으로 장거리미사일 위협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전 세계인들에게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은 김정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²³¹⁾하면서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라크·리비아 지도자들의 몰락을 통해 나타난 핵무기 미보유국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한 김정은에게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정권의 사활을 건 과업이지만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체제 불안정성을 점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고 ‘선당용군’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과거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불안정 시기에 ‘선군정치’로 극복하였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의 ‘선당용군(先黨用軍)’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예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정은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체제의 불안정성 발생 여부일 것이다.

23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3001070421313001>, “탈북자들 김정은 체제 굳건해지고 있다”, (문화일보, 2017.8.30.)

231) 『로동신문』, 2017년 10월 30일, “격동적인 (북한의) 현실은 자력갱생의 힘은 적대세력들의 체제·압박보다 더 강하고 최후 승리는 조선 인민의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5.1 선군정치의 한계

김정은 시대 들어 선군정치가 ‘선당(先黨)’으로 변화를 맞이한 것은 선군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군부의 대내외 정책 개입 및 실행은 장기간 비정상적인 현상을 누적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의 정상국가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반에는 분명 대규모 인력 동원의 기재로 활용 가능한 군부의 막대한 기여가 필요하지만 ‘수령’의 지위와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유지의 근간을 확립하기 위해 ‘선당’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군부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폐쇄적이고 부패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집단으로 ‘군부’를 꼽았을 것이다. 이것은 군부를 우선시하는 ‘선군’의 산물이며 ‘선군’이 태생적으로 내포한 한계 때문일 것이다.

선군정치의 한계는 첫째, 군 관련 우선적인 자원배분으로 여타 경제부문에서 필요한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내부자원 고갈에 따른 전체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경제난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비록 북한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후 1999년부터 경제 성장세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내부 자원부족에 기인한 경제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폐해가 누적되어 온 결과 심각한 산업 불균형과 물자부족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아래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북한에서 발표하는 예산대비 북한 국방비 비중이 남한의 2~3%²³²⁾보다 훨씬 높은 평균 15%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독특한 북한의 예산운용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은폐된 일반 인민경제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국방비는 국가예산 대비 20% 이상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³³⁾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2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014600071.HTML?input=1195m>, “美국무부, GDP대비 국방비지출 북한이 전세계 1위”, (연합뉴스, 2016.12.23.)

233) 홍권희,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논문, 2014.2.), p. 80.

편성은 선군정치를 강조할수록 더욱 그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김정
은의 ‘경제건설’ 노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북한 재정지출 중 국방비 비중

연 도	'98	'99	'00	'01~'02	'03	'05	'07	'08~'11	'13	'14~'15	'16~'17
비중(%)	14.6	14.6	14.3	14.4	17.7	16.4	16.6	15.8	16	15.9	15.8

* 홍권희,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논문, 2014. 2). p. 79 ; 『조선중앙연감』 등을 참고로 연구자가 재정리하였음.

미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북한은 23.3%로 1위
에 올랐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 전체 경제활동 가운데 4분의 1에 가까
운 규모가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사비 확충에 쓰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평균값을 비교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의 GDP 대비 군비는 2위인 오만의 11.4%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사
우디아라비아(8.5%)와 남수단(8.4%), 에리트레아(6.9%)가 3~5위였고,
6위인 이스라엘(6.5%)이나 7위인 요르단(6.3%)도 경제규모 대비 군비지
출 비중이 높은 국가였다. 한국(2.6%)은 47위였고, 주요 국가 가운데 미
국(4.3%)은 15위, 러시아(3.8%) 20위, 영국(2.3%)은 53위, 중국(2.0%)
은 68위, 일본(1.0%)은 136위였다.²³⁴⁾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는 군수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병행하여 여타 경제부문의 발전요소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 조성 과 국제적 고립의 심화이다. 북한
은 선군정치 표방 이후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였고, 남한에 대한 전쟁위협
일환으로 장사정포(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전력을 증강하여
전방에 추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거칠 것 없는 군사력 강화 노력

23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014600071.HTML?input=1195m>,
“미국무부, GDP대비 국방비지출 북한이 전세계 1위”, (연합뉴스, 2016.12.23.)

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안보의 위협이 되었으며, 일본을 자극하여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의 군비증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불안정은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한반도내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정당화 하고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중·러의 대응을 유발하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1999년 6월 연평해전과 9월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에 이어 2000년 3월 서해 5도 통항질서 공포 및 2002년 6월 서해교전 등 모험적 군사정책을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²³⁵⁾ 특히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대북 특사가 방북했을 때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가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되어 한반도 안보위기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선군정치의 대외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선군정치에 따른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은 북·미 관계를 극한 대결국면으로 내몰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여론을 증폭시켰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조성과 북한의 국제고립을 가중시킴으로서 북한의 체제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선군정치는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개혁과 개방은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와 체계와 방법을 우리식으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며,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²³⁶⁾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원조와 협력을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약탈의 올가미”²³⁷⁾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통해 내정간섭과 가치관 및 사회구조의 이식을 시도하고, 서방화와 예속적이고 지배주의적 제국주의 질서를 수립하려 하

235) 이상헌,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005.8), p. 77.

236) 『로동신문』, 1999년 9월 17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237) 『로동신문』, 2002년 10월 25일.

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과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단행한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외자유치를 위한 신의주와 금강산, 개성지구의 특구 지정 등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단순히 체제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부분적이고 실용주의적 편법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최근 수년간 비교적 큰 규모로 도입되는 외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것은 개혁·개방을 위한 본질적인 인식과 추진력이 결여된 채, 북한 지도부가 군사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5.2 대내외 환경 평가

5.2.1 대내 환경평가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선당용군²³⁸⁾의 의미를 정확하게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체제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작용했듯이 김정은의 현 체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김정은의 향후 선군정치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17. 9월 기준 / 단위 : 명

연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및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07>에서 제시된 9월까지의 탈북자 현황을 종합 정리

대내상황을 잘 보여주는 첫째는 탈북자 통제에 김정은 시대 들어 주민

238) 『조선중앙방송』, 2013년 1월 1일,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끝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제와 경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1,093명으로 이중 지난해 탈북자 수는 1,418명이다. 이는 2009년 2,914명, 2011년 2,706명 등 한해 3,000여 명에 육박하던 탈북자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감소 추세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까지의 겨우 881명에 불과하여 연말까지는 산술적으로 1천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이 없는 한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의 감소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 데 첫 번째는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에 붕괴되었던 당의 하부조직 기능을 정상화하고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주민통제가 강화된 결과이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첫해 전국 분주소장(我 파출소장) 대회와 2013년 1월 당 세포비서대회를 통해 주민통제 역할을 독려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우리의 모든 세포비서들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한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당의 돌레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²³⁹⁾라고 언급하며 주민들과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당 세포비서들에게 주민통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국경지역에 탈북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백여 명의 보위성 요원으로 편성된 그루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파견되어 한국인 또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기업에 취업해 탈북자 색출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경경비 초소에서 탈북자의 도강료를 뇌물로 받더라도 신고하면 용서해 주는 등 국경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239) 『조선중앙방송』, 2013년 1월 30일.

특히 2016년 4월 발생한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 여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탈북자 검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위성이 아닌 대남 무력도발을 담당하는 경찰총국 요원들을 중국·러시아 등 국경지역으로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면서 탈북자 검거 이상으로 남한 종교인, 탈북 브로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식통들은 “탈북자를 체포해 오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잡아들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보위원 수십 명이 활동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다.²⁴⁰⁾

이러한 국경지역 일대 통제강화는 탈북자가 국경경비대에 뜯기는 도강료(渡江料)를 크게 올리는 결과를 낳았는데 2008년에는 300위안(5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5만 위안(약 900만원)으로 약 150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²⁴¹⁾

이러한 인원통제와 함께 중국 핸드폰을 이용한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신 전파탐지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외부의 압박이 아닌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7년 2월 “중국 손전화 사용 주범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고 단속이 되면 노동단련대나 정치범수용소, 심한 경우 총살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9월 두 달간 보위부에 체포된 주민이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²⁴²⁾

두 번째는 내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 탈북의 주된 이유는 ‘굶주림’이었다. 최근까지도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²⁴³⁾

240) <http://www.mediapen.com/news/view/161659>, “북 경찰총국 지휘 북중 접경서 탈북자 7명 납치”, (미디어펜, 2016.6.24.)

241) <http://www.segye.com/newsView/20160511003667>, “탈북자 3만 명은 먼저 온 통일”, (세계일보, 2016. 5.15.)

242) 김채환, “김정은 정권의 국경통제와 실태”, 『월간 북한』 11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17년), p. 65.

243) <http://news.joins.com/article/22008834>, “김정은 시대 들어 국내 입국 탈북자 감소 추세”, (중앙일보, 2017.10.13.)

그러나 과거 김정일 시대의 열악한 경제 환경과 달리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은 ‘안정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²⁴⁴⁾ 2016년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3.9% 성장했고 전국적으로 400여개 이상인 장마당 등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 지표는 2000년 6.1% 성장을 기록한 이후 17년 만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²⁴⁵⁾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은 이러한 지표만이 아니다. 장마당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내수산업이 회복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온 소비재의 거래도 중국산에서 북한산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장마당’과 ‘포전담당책임제’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²⁴⁶⁾

2003년 시장을 공식 허용한 이후 김정은 정권 들어 200개에서 400개로 ‘장마당’이 증가하였고, 전체 매대 수는 총 109만 2천여 개, 시장 관련 종사자는 109만 9천여명으로 추정²⁴⁷⁾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배급제가 중단된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한 재미교포가 라진시를 방문하여 장마당에 들렀을 때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시장 활성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인구 20만 명 이하인 라진시에서 하루 장마당 이용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시장 규모도 우리의 예전 ‘동대문’, ‘남대문’ 시장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한다.

“시장을 하루에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말인가요?”(재미교포)
 “네 어떤 때는 만 명도 더 된다고 합니다.”(북 안내원)
 “한마디로 굉장하다. 예전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 물론 수준은 예전 한국의 시장들과 비슷해 보인다.”(재미교포)²⁴⁸⁾

24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54800014.HTML?input=1195m>, “북 경제 아직은 안정적, 좀 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2017.9.6.)

24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54800014.HTML?input=1195m>, “북한 경제성장률, 17년 만에 최고치…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탈출”, (테일리안, 2017.8.20.)

2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42114015&code=990100, “김정은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경향신문, 2017.7.24.)

2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42114015&code=990100, “북 전역에 공식시장 404개, 종사자 110만 명”, (뉴스1, 2016.12.9.)

2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42114015&code=990100, “없는 게 없는 북한 장마당, 입이 딱 벌어졌다”, (오마이뉴스, 2012.12.5.)

이러한 비교적 안정적인 북한경제 사정은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변화를 맞고 있다. 대북제재결의 2375호는 2006년 대북제재결의 1695호 이후 10번째로 이번 제재안은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이 금지되고 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수송이 차단된다. 또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유제품과 원유 수입량도 줄게 된다. 제재 블랙리스트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이 포함되었고 또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허가를 금지하였는데, 현재 해외 파견노동자는 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²⁴⁹⁾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제재 전략에 따라 대북인권제재, 원유수입봉쇄,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 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중국에게도 성의있는 동참을 촉구하였고,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0여개 국가가 북한 대사관을 철수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쿠웨이트·UAE 등이 북한 노동자의 비자발급 신규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93%를 차지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재의 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의 여파로 그 동안 여유 있게 배급을 타 먹던 계층들이 유난히 큰 고생을 치르고 있다”며 “자체로 (빼기밭) 농사를 짓고 장사로 살아온 주민들은 배급계층(간부 층)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지연군에 주둔하고 있는 호위총국 병사들은 국제 사회가 지원한 분유를 공급받았는데 제재에 따라 지원이 끊기면서 몇 달째 분유를 못 먹고 있다”고도 밝혔으며, 또 북한의 한 외화벌이 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양시민들은 ‘식량판매소’를 통해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

249) 『KBS뉴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대한 평가와 제언”, 2017년 9월 19일.

급 단위를 공장기업소로 바꾸면서 가동을 멈춘 평양시 공장 70%가 종업원들에게 배급을 중단했다”²⁵⁰⁾고 한다.

중국의 제재 동참에 따라 북한 김정은은 이에 맞불을 놓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중국기업·개인과 합작 또는 합자형태로 중국에 설립한 기업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공고하면서, 북한에 있는 북·중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는데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중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와 식당 북무원들을 철수시키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²⁵¹⁾

북한은 2017년 9월 1일 자 노동신문 ‘위대한 강국의 시대’ 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어제는 고난의 산을 넘었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높은 험산준령을 더 용감하게 타고 넘어야 한다”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²⁵²⁾

그러나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는 여전히 북·중간 개인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한 폐쇄경제 상황을 수십 년이나 겪었고 300만명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최악을 경험했던 학습효과와 수십년간 지속된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만성적인 내성이 생김으로써 경제적 고립을 통한 ‘핵 포기’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가장 큰 동기가 배고픔이었는데 배고픔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층 더 강화된 탈북루트와 처벌, 도강비용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 큰 죄만 안 지으면 체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급변사태 촉진 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상황을 잘 보여주는 두 번째는 군부통제 상황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250) 광승지, “중, 자국내 북한 관련 기업 폐쇄조치 강행”, 『월간 북한 11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7), pp. 130 - 132.

2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9/2017102901004.html, “中 북한식당 한산...”김정은, ‘올해 말까지 모두 철수하라’ 지시”, (조선일보, 2017.10.29)

2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54800014.HTML>, “북 경제 아직은 안정적, 좀 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2017.9.6.)

미국과 한국에 대해 ‘원썩’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체제생존을 위해 협상이 필요하듯이 군부는 김정은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암덩어리이지만 혁명의 무장세력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5년 만에 선당정치 회귀, 공포통치를 통한 군 수뇌부 교체를 통해 ‘김정일의 군대’를 ‘김정은의 군대’로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⁵³⁾ 2016년 前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처형 이후 군부에 대한 공포통치가 뜸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군부장악에 성공한 김정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정은의 군부통제는 ‘군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현되고 있다. 김정은은 “적대 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²⁵⁴⁾이라며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계승했다고 강조하지만 군부를 권력의 핵심에서 점차 멀리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현 가능성에 직면해 북한의 군부가 득세하여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게 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²⁵⁵⁾

김정은은 2016년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였고,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44년 만에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선당용군 시대 김정은이 군부와 군사관련 사업을 획일적으로 통제·지도할 수 있는 일원화체제를 갖춘 것이다. 또한 과거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되었던 군부 인사의 대표격인 총참모장 이영호 처형 이후로는 더 이상 이름을 올리지 못 하고 총정치국장이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이 자라공장 현지지도 시 김정은의 금고지기였던 ‘한광상’이 중장 계급의 군복을 착용하고 나타났는데, ‘한광상’은 2013년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당 운영 자금과 재

253) <https://www.voakorea.com/a/3828501.html>, “북한군 5년 만에 김정은의 군대로 탈바꿈”, (VOA, 2017.4.28.)

254) 『조선중앙방송』, 2016년 1월 1일.

255) <http://news.joins.com/article/22051631>, “북한 김정은 군부가 두려워 최용해 앞세운 말못할 사연”, (중앙일보, 2017.10.26.)

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5년 3월초 이후 북한매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숙청됐다는 설이 제기된 인물인데 2015년 11월 리을설 장의위원회 명단에 오른데 이어 같은 달에 김정은을 세 차례 연속 수행하며 견재를 과시한 이후 약 7개월만에 군복을 착용하고 나타난 것이다. 한광상의 군복 착용은 과거 경력을 고려해 볼 때 군 재정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의 예산관리, 군의 대외무역 수입 및 지출을 당분간 군 인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것”, “군의 부패와 재정비리에 칼을 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²⁵⁶⁾으로 군부가 관찰하고 있는 수산사업소와 광산을 비롯한 각종 외화벌이 사업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²⁵⁷⁾는 김정은의 의지의 산물로 김정은의 대군 시각을 제대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 주석단 호명에서 이전에 김영남-황병서(총정치국장)-박봉주(총리)-최용해(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순이었으나 이번에는 김영남-최용해-박봉주-황병서 순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당을 통한 군부통제를 반영한 것으로 선당용군 체제로 나아가려는 김정은의 구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2.2 대외 환경평가

현재 북한이 당면한 국제적 고립은 김정은이 추구하는 맹목적인 ‘선택정치’²⁵⁸⁾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은 2012년 개정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였고, 2013년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핵개발을 통한 민생경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17년 수소탄 실험 성공과 함께 장거리미사일인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타격능력 고도화를 자신하고 있다.

256) <http://www.segye.com/newsView/20160708002627>, “중장 계급장 단 한광상”, (세계일보, 2016.7.9.)

257) <https://www.voakorea.com/a/3426853.html>, “북한 노동당, 군부 재정통제 강화한 듯”, (VOA, 2016.7.20)

25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508008200038/?did=1825m>, “중 전문가, 김정은 선군정치 → 선택정치로 구체화”, (연합뉴스, 2016.5.8.)

과거 미국의 대북 전략인 ‘전략적 침묵’으로 국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은 트럼프 출현과 함께 전 세계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명이 되었다. 연일 미국 주요 언론에 등장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미·북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평가를 보면 최근의 미·북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자살임무를 수행하는 로켓맨”, “확실히 미친 놈”으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늑다리 미치광이”로 평가하며 거의 싸움닭 수준의 막가파식 대응을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대응과 함께 북한의 ‘괘 폭격 위협’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미국 대학생 ‘워비어’ 사망 이후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행한 30분간의 연설 중 북한에만 20분을 할애하였는데,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며,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트럼프는 “시험 말라. 미국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의 이행 강조와 함께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갖은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난 8월 16일 김정은은 2일 전인 8월 14일에 전략군사령부로부터 ‘괘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김정은의 복잡한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란 표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경고하자, 미군 기지가 있는 괘 주변 해상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며 ‘맞불’을 낚았는데, 특히 지난 10일엔 자신들이 괘 주변 해상을 향해 쏜 미사일의 개수와 예상경로, 비행시간 및 거리, 낙하지점 등까지 공개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대

로라면 김정은은 꺾을 겨냥한 미사일 타격 방안을 보고받은 뒤엔 “미국에 충고하건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전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2017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두 번째 시험발사 장소를 자강도 무평리 일대로 정한 것도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북 국경 45km까지인 완충지대 인접 지역(50km)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⁵⁹⁾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미국은 핵잠수함 및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통한 압박과 함께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²⁶⁰⁾은 ‘오토 워비어법’²⁶¹⁾의 미 하원 통과로 더욱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악화일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관련 기업들에 대해 안보이사회 결의안이 발효된 2017년 9월 12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2018년 1월초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실제 중국 상무부의 폐쇄통보조치가 내려진 이후 중국 대도시에서 개업 중인 북한 식당들은 숨을 죽이며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던 북한노동자들의 귀국행렬도 눈에 띄게 늘었다.²⁶²⁾

259) <http://news1.kr/articles/?3075892>, “김정은 대미 강경자세 불구 싸움은 피하려 해”, (new1, 2017.8.16.)

260)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의 기업이나 은행 등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이나 은행의 자산 등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67477, “미 하원 북한 송통 죄는 ‘오토 워비어법’ 통과”, (중앙일보, 2017.11.8.),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것으로, 이 법이 실행되면 북한은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이다.”

26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8000274>, “중국 상무부, 중국 내 북한 기업 120일 내 폐쇄”, (뉴스핌, 2017.9.28.)

이번 조치로 인한 제재대상 기업에는 북·중 합작·합자·외자기업 등 사실상 중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관련 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들은 모두 이에 해당돼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수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 관련 기업들에 대해 폐쇄조치와 함께 안보리 제재 2375호의 주요 조치 중의 하나인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발급을 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본 계약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곧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³⁾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그동안 북·중 교역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 온 요녕성의 단둥과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9월 3일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75호’(2017년 9월 12일)를 통과시키고 중국이 이에 적극 호응해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의 폐쇄를 통보(2017년 9월 28일)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조이면서 상황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7년 4월부터 중국내 북한식당의 여종업원에 대한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위탁가공 시범공단인 단둥시 수출가공원구는 중국내 인기 의류업체들이 입주해 최근 수년간 톡톡히 재미를 보았으나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단둥지역에는 해외 명품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업체와 수산물 가공 및 전자제품 조립공장 200여개가 2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생산활동을 해왔는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제한으로 인력 수급 및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²⁶⁴⁾

263) <http://news1.kr/articles/?3137654>, “北 김정은, 중국 내 노동자·종업원 철수 명령…제재 맞불”, (테일리 nk, 2017.10.30.)

264) 광승지, “중, 자국내 북한 관련 기업 폐쇄조치 강행”, 『월간 북한 11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단동과 같이 북·중 교역 거점인 훈춘지역도 사정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은 북한의 라선시와 인접해 있어 수천 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하는 복장 및 수산물 가공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난 8월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이미 크게 타격을 받았었다.²⁶⁵⁾

중국이 2017년 9월 28일 발표한 북한 관련 기업의 폐쇄 통보 등 대북 제재 적극 동참은 2017년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2375호’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이번의 북한 관련 기업 폐쇄통보는 앞서 제재조치를 취한지 5일 만에 나온 것으로 2017년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상무부가 이행 공고를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기민한 조치이다.²⁶⁶⁾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기업·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기업·개인을 겨냥한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그 대상에 오르자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은 한·미·일을 대상으로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문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혈맹 카드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한 목소리로 미국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도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강조하며 쌍중단을 토의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7), p. 134.

265) <https://www.voakorea.com/a/4016142.html>, “대북제재, 중국 훈춘 수산업계 직격탄”, (VOA, 2017.9.6.)

266) 광승지, 『월간 북한 11월호』, 전계기사.

5.3 선군정치 변화 전망

5.3.1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 분석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를 기반으로 당·군 관계 또는 군부의 위상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루어 왔으나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린 후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와 유사성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선행연구 또는 예상 유형을 유추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판이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로 체제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김정일 시대 보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치행태의 급격한 변화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또한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학자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대해 조심스런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임춘환은 북한군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면서 김정은의 정권 획득 과정이 군부 또는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재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군부 또는 주민들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이들의 불만과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무장 세력인 군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김정은도 군사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추켜세우면서 선군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안경모는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을 분석하면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흔 핵심인 선군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선군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지침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하위 개념이고 ② 조직적 차원에서 선군정치의 대명사인 국방위원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③ 정책적 차원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군노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 숙청 이후 후견인 통치에서 벗어나 당·군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면서 이전의

결과와는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수진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전략을 분석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위기관리전략을 선군정치로 정의하고,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부작용에 따른 위기인식들로부터 벗어나서 북한을 더 이상 비정상국가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상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²⁶⁷⁾고 하였다. 즉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를 탈피하여 정상적인 당·군 국가체제로 복원한다고 진단하였다.

박상규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군 위상 변화를 분석하면서 김정은 시대 들어 선당정치로 변화된 사실을 적시하고 향후 군부의 역할 측면에서 ① 선군정치 회귀 가능성 ② 당의 군대로의 역할 강화 가능성 ③ 군사정변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선군에서 선당으로 변화되면서 군부의 권력약화와 소외 현상 심화를 지적하면서 군부의 권력약화와 함께 군부 쿠데타 등 내부 급변사태 등을 제시하였다.

서장원은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 구축과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면서 김정은이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대회를 통해 당의 통제 기능을 완전하게 복원하였고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하면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김정은이 김정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안정적인 권력으로 재편하는 ‘홀로 서기’를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는 당적 통제가 강화된 당 상위 군부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된 것이다. 향후 김정은 시대의 북한체제는 특별한 외부의 동인이나 내부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에 대한 당적 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선군정치는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당정치를 선택하면서 그 위상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인 군부 쿠데타 또는 내부 급변사태 등을 지적하면서 선당정치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군정치의 위상이 크게 변화된 이후 군부의 위상과 역할은 북한자료의 부족과 경험적 자료 부족 등으로 현장접근이

267) 이수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 92.

쉽지 않고, 또한 이를 직접 체험한 탈북자들과의 접촉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3.2 선군정치 전망

제6차 핵실험이후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과 선군정치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선군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선군정치가 과거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현재金正은의 통치행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선군보다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그리고 선당, 선택으로 대변되는 정책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통치이념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국가운영은 선당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선택·선경으로 언급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김정일 시대의 선군 통치이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실천을 위한 군 통솔수단으로 선군이지만 실제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볼 때는 선군보다는 용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의 ‘용군정치’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먼저 군부의 위상 변화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군부 엘리트들 배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삭제를 비롯하여 선군정치의 핵심 기관으로 선군혁명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가의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혁명 노선이 삭제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군부가 주도하던 핵개발을 당 군수공업부에서 주도하면서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또한 주석단에서도 당-정-군 순으로 세력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국내외 정책에 관여하였으나 최근 남북대화시에도 총정치국장만 군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군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당의 장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하자원, 수산물, 인력송출 등을 비롯한 각종 외화벌이 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군부가 이영호와 장성택 숙청, 그리고 최근 한광성의 군부 재정담당 보직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에서 직접적으로 군부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군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도 북한 군부를 혁명의 무장세력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국가 건설의 중요한 동원기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김정은의 용군정치가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첫해 북한 군부의 싸움준비, 훈련실태, 무장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둘러보았고 이를 통해 2013년부터는 국방공업 강화를 통한 무장장비 개발을, 2015년부터는 싸움준비 강화, 2016년부터는 전투태세 준비 강화를 강조하여 왔으며 올해는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이하여 ‘훈련의 해·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만능싸움꾼 육성, 전투동원태세 확립, 주체무기 더 많이 개발·생산’을 주문하고 있다.²⁶⁸⁾ 또한 강성국가 건설과 민생발전에 군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하면서 당이 제시하고 있는 4대 강군화 노선(정치사상, 도덕, 전법, 다병종 강군화) 관철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부에게 매우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군대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8) 통일교육원,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7.1.1.)

Ⅵ. 결 론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한 김정은이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어떻게 계승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북한 군부의 역할과 위상, 선군노선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재조명해 보았다. ‘선군정치’는 병영식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바로미터이며 김정은 또한 집권 초기 권력기반을 다지고 공고화하는데 ‘선군정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면에서 ‘선군정치’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김정은의 정책 방향을 진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는 북한 군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켰고, 군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부각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남혁명을 위한 무장세력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군부는 대남, 대외 분야까지 개입을 하면서 군부 엘리트들이 국가 기관의 수뇌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 기간 중 김정은이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이 류레없이 준엄하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²⁶⁹⁾ 라고 평가한 부분에서 선군정치의 과거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통해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군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순리로 예견되었으나, 김정은은 군사 우선 정책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권력

269) 『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기반을 장악하고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즉 김정은은 선군에서 선당, 선경, 선행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선군은 용군으로 변화되었고 군부 또한 그 위상과 역할 또한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용군정치는 김정은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총화에서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를 주체의 기치 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²⁷⁰⁾라고 하면서, 주체없는 선군, 수령의 영도가 배제된 선군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삼으면서 조선노동당의 최고 강령으로 분명히 했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선군정치의 핵심인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국무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지도자의 기능과 같이 조정되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폐지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군부 인사 배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군부인사들이 주도했던 총정치국장을 당료 출신들로 임명하였고, 군부 이권사업과 경제활동 관련 재정관리를 위해 당료 출신인 한광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군부의 영향력 축소와 함께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강화 의지가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추구이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²⁷¹⁾으로 명명하였다. 최초 병진 노선 발표 시 많은 전문가들이 김일성의 실패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회상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치부하면서 미국은 물론 서방세계와 대한민국도 병진노선을 포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중앙일보에서 공개한 책자 ‘조선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르는 일시적

270) 『로동신문』, 전계기사.

271) 위 기사.

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음²⁷²⁾을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김일성이 재래식 전력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구했다면 김정은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보다 열세인 재래식 전력 개발이 아닌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 개발 분야에 집중하면서 가장 확실한 정권 보호수단 확보와 함께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²⁷³⁾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군부에 의해 주도되며 국방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한 반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당 군수공업부 주도하에 추진되며 군부의 비정상적인 권력 비대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군노선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가? 김정은의 용군노선 변화가 당장 남-북간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단은 너무 성급한 자세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정권 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절대적인 전력우위 확보를 위한 대전제로 핵보유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북간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평행선을 마주 보고 폭주하는 기차와 같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선당, 선경, 선행정치는 분명하게 군부의 역할 축소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통치’는 군부 엘리트들의 소외감과 극도의 공포감도 내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은 군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당의 군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용군정치는 공포통치와 당적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²⁷⁴⁾라고 증언하듯이 외형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27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75>,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이해”, (통일뉴스, 2017.9.1.)

273)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외부로 표출된다는 것은 북한체제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군부 엘리트들의 공포심과 소외감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 군부 엘리트들의 이탈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군부 엘리트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과 소외감을 체제이탈을 위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주도하 남북대화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시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한의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²⁷⁴⁾고 하는데 북한 군부 가족들도 장마당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사상적 변화나 이탈 가능성도 내재된 것이다.

독재국가의 지도자 대부분이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였던 군부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사실은 아마 김정은이 군부의 비정상적이고 비대해진 영향력을 차단하고 힘 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7년간 폭정을 일삼았던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가 축출된 것은 재스민 혁명 이후 김정은에게 적잖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작은 구멍에서 비롯된 물방울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김정은 정권의 견고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부 엘리트들의 사상적 이탈과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중동발 민주혁명 와중에 많은 중

274) <http://www.sedaily.com/NewsView/1L5F7A34NX>, “태영호 기자회견,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 공포정치 하고 있다. 맹비난“, (서울경제, 2016.12.28.)

275) 상계기사.

동국가들의 독재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북한은 아직도 견재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김정은을 중심으로 더욱 굳건한 체제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현재 김정은의 체제안정도는 공포정치, 강력한 통제 등을 기반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북한 체제 속성상 쿠데타의 징후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체제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세 번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던 북한이지만 2016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9%를 기록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탈북자 수 급감과 함께 국제적인 대북제재 고립에도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김정은은 집권 초기 김정일의 통치이념을 계승하여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부의 충성을 독려하였지만 비대한 군부권력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용군정치를 기반으로 강력한 통제와 힘빠기로 군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 번째,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체제를 수호했던 사례 고려시 김정은도 현재는 용군정치로 군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대남·대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선군 도발카드를 활용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 과거 미 행정부의 일관된 전략적 무시로 인해 외면 받았던 북핵이 이제는 전 세계의 핫이슈가 되면서 김정은의 국가전략 우선순위는 당연히 '선핵'이 자리매김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선경'정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 번째, 김정은의 선핵, 선경, 선당 정치는 북한 군부를 소외시키고 체제를 안정화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 또는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용군정치를 통해 군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김정은의 선군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내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 북한 자료는 open source인 선행 연구 자료와 각종 간행물 등에 의존해야 하는 제한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부족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향후 군부 출신 탈북자를 비롯한 국내 군사전문가 등과 함께 북한의 실상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두 번째, 김정은의 선군정치는 선당, 선행, 선경노선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쳐져있지만 용군이라는 형태로 군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군부를 활용한 내부 체제결속과 대내외 정치적 압박은 아직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과 대치하면서 핵전쟁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전쟁 이전에 효과적인 도발수단은 바로 군부를 활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군부가 과거의 선군정치가 아닌 용군정치 하에서 군부 엘리트들의 충성도와 결속도가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군부엘리트들의 도발 또는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초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가파 식 도발 위기 고조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활용 가능한 군부의 도발카드를 대비하여 이를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면밀한 전략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김정은의 용공정치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비해 외면받고 있는 군부 엘리트들과 군인들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의 중심에서 이탈시키고 사상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연속간행물

- 곽승지. (2017). 중 자국내 북한관련 기업 폐쇄조치 강행. 『일간 북한』, 2017-11(551), 134.
- 김동엽. (2016). 김정은 리더십 안정적으로 구축돼. 『민화협 통일정책 포럼』
- 김병조, 오궁현. (1997).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 변화와 전망. 『정책 연구 보고서 97-12』
- 김보미. (2013).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 연구』, 16(2), 87-89.
- 김성주. (2015). 북한 사회주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과정 연구. 『현대북한 연구』, 18(2), 298.
- 김영윤. (1997). 북한 지하경제의 실태와 전망. 『북한조사 연구』, 1, 170.
- 김용현. (2001).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무. (2017). 김정은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1584, 9.
(2015).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부. 『통일시대』, 109, 26 - 29.
- 김찬규. (1997). 북한의 식량 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 연구』, 1, 179.
- 김창근. (1999). 북한체제 위기의 본질과 김정일 정권의 변화수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 발표 원고. 14.

- 김창희. (2013).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 연구』, 22(3), 187.
- 김채환. (2017). 김정은 정권의 국경통제와 실태. 『월간 북한』, 2017-11(551), 65.
- 김태구. (2015).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 연구. 『신진연구논문집』, 2015-10, 52.
- 남궁영. (199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효험은 있는가. 『통일경제』, 27, 36.
- 두병영. (2009). 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규. (2014).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 위상변화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택. (2007). 북한군부의 위상강화와 정책결정 영향력. 『국방정책연구』, 78, 159.
- 서장원. (2016).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 구축과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도. (2010).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부 위상 변화.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동만. (1997).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형성. 『외교안보 연구』, 2, 167-172.
- 안경모. (2013).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상준. (2002).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규렬. (1989). 남북한 군사경쟁의 행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무철. (2013). 김정은 체제의 북한 평가 및 전망 : 한반도 정세 2013년 평가와 전망, 『한반도리포트』, 4.
- 이선재. (2014).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 『현대북한연구』, 17(1), 164.
- 이석수. (2002).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정책연구보고서』, 02-12, 14-15.
- 이수진.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곤. (2014). 중국의 한국전쟁 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태섭. (2002).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학자 연구 논문집』, 265.
- 임춘환. (2012). 북한군 군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용훈. (2013).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232.
- 정일영. (2013).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6(2), 18.
- 차두현. (2009). 북한 당·군 관계의 변화 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석. 『아산정책연구원』
- 차성근. (2014). 북한체제 변동 가능성과 북한주민 의식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주활. (2009). 북한 헌법 개정과 군부위상 변화. 『송영선의원 주최 간담회』
(1999).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장악. 『WIN』, 6, 161.
- 최준택. (2007). 김정일의 정치리더십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천모. (1997).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와 향후 대북정책 전망. 『KDI 정책포럼』, 129.

- (1999). 북한경제의 정체성과 식량수급 전망. 『한국동서경제학회』, 11(2), 127.
- 홍관희. (1998).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외교-한계와 전망. 『북한조사연구』, 1(2), 128.
- 홍권희. (2014).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일보. (1997). 월간조선, 4, 226.
- 통일교육원. (2017).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2) 비연속간행물

- 강명도. (1995). 『북한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 중앙일보사.
- 강준만. (2014). 『한국 근현대사 산책 1950년대판 1권』. 서울 : 인물과 사상사.
- 고미요지 저. 이용택 역. (2012).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 중앙 M&B.
- 고재홍. (2006).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서울 : 오름.
- 김동길.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서울 : 선인.
- 김병로. (1994).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김성철. (1999). 『북한 이해의 길잡이』. 서울 : 박영사.
- 김창순. (1961). 『북한 15년사』. 서울 : 지문각.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 나남.
- 박석삼. (2004).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서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형중. (2002).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 백산자료원.
- 서대숙.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 청계연구소.
- 서재진. (2001). 『북한 인권 백서』. 서울 : 통일연구원.

-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1994). 『김일성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 중앙일보.
- 여정. (1991).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 동아일보사.
- 윤대일. (2002).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 월간조선사.
- 윤여상. (2001).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대구 : 세명.
- 이기원. (1977).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 분석』. 서울 :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 이대근. (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이무철. (2016).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이민룡. (2004). 『북한군 대해부』. 서울 : 황금알.
- 이상우. (2014). 『북한 정치변천』. 서울 : 오름.
(2014).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 과정』. 서울 : 오름.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 이항구. (1988). 『북한의 현실』. 서울 : 신태양사.
- 장명순. (1999). 『북한 군사연구』. 서울 : 팔복원.
- 정규섭. (1997).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 일신사.
- 정성임. (2007).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 세종연구소.
- 정영태. (2000).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 정창현. (1999).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 토지.
(2011).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서울 : 선인.
- 최수영. (199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하태경. (2011). 『북한의 3대 세습과 왕자의 난 만화 김정은』. 서울 : 시대정신.
-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 시대정신.
- (2001).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 월간조선사.
- 후지모토 겐지 저. 한유희 역. (2010).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 맥스미디어.
- 육군사관학교. (1999). 『북한학』. 서울 : 박영사.
- 통일부. (2001).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 통일부. (2013). 『2013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 웃고문화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2017 북한이해』. 서울 : 대원문화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2014 북한지식 사전』 서울 : 늘품플러스.
- 연합뉴스. (1999). 『북한용어 400선집』. 서울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99). 『2000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

3) 국내 신문, 간행물 및 기타 자료

- 『경향신문』. 1997년 3월 20일.
- 『경향신문』. 1997년 5월 23일.
- 『경향신문』. 1999년 4월 3일.
- 『국민일보』. 2017년 10월 11일.
- 『동아일보』. 1994년 12월 1일.
-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2일.
- 『연합뉴스』. 2017년 2월 12일.
- 『연합뉴스』, 2017년 9월 10일.
- 『중앙일보』. 2004년 11월 30일.

『MK뉴스』. 2011년 12월 21일.

KBS 뉴스. 2016년 12월 20일.

3) 인터넷 사이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뉴데일리 www.newdaily.co.kr
뉴스핌 <http://www.newspim.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매일경제뉴스 <http://news.mk.co.kr>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북한인권 <http://korea318.com/>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http://www.nksis.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연합뉴스 TV www.yonhapnewstv.c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워싱턴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코나스넷 <http://www.konas.net/>
통일뉴스 www.vop.co.kr
통일신문 <http://www.unityinfo.co.kr/>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
KBS 뉴스 <http://news.kbs.co.kr/>

Naver 지식백과

RFA(Radio Free Asia) www.rfa.org/korean

SBS 뉴스 news.sbs.co.kr

TV 조선 <http://news.tvchosun.com/>

VOA(Voice Of America) <https://www.voakorea.com/>

2. 국외문헌

1) 연속간행물

김일성. (1954). 인민 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김정일. (1993). 사회주의에 대한 휘방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6(2), 87-89.

2) 비연속간행물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제 25권』. 평양 : 사회과학원.

김일성. (1953). 『김일성 저작집 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68). 『김일성 저작집 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20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3).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3). 『김일성 저작집 30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8). 『김정일 저작집 13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2000). 『김정일 저작집 1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철우. (2000).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조성박. (1999).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북한. (1997). 『조선 대백과 사전 5권』

북한. (2012). 『조선로동당 규약』

3) 신문, 간행물 및 기타 자료

『로동신문』. 1997년 3월 20일.

『로동신문』. 1998년 5월 28일.

『로동신문』. 1998년 10월 9일.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로동신문』. 1999년 9월 17일

『로동신문』 . 2000년 4월 24일.
『로동신문』 . 2000년 9월 15일.
『로동신문』 . 2001년 12월 21일.
『로동신문』 . 2002년 10월 25일.
『로동신문』 . 2013년 4월 1일.
『로동신문』 . 2013년 8월 12일.
『로동신문』 . 2013년 12월 9일.
『로동신문』 . 2016년 5월 7일.
『로동신문』 . 2016년 11월 1일.
『로동신문』 . 2017년 3월 1일.
『로동신문』 . 2017년 10월 30일.
『조선중앙방송』 . 1995년 7월 10일.
『조선중앙방송』 . 1988년 4월 23일.
『조선중앙방송』 . 1999년 2월 5일.
『조선중앙방송』 . 1999년 7월 22일.
『조선중앙방송』 . 2013년 1월 1일
『조선중앙방송』 . 2013년 1월 30일.
『조선중앙방송』 . 2016년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 2017년 7월 9일.
『조선중앙통신』 . 2017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 . 2017년 8월 30일.
『조선중앙통신』 . 2017년 12월 12일.
『내외통신(주간판)』 . 1086호, 1999년 12월 5일.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First Policy in the Era of Kim Jong-un

Kim, Kyoung-Youl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Having taken power in a third-generation succession that is hardly precedented in the modern history of politics, Kim Jong-un places top priority on “Byungjin — the parallel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 robust nuclear weapons program” on the basis of ideological unity, terror, and effective internal control, thus posing grave security threats by threatening Northeast Asia and even the US territory. Kim is flaunting a leadership that is not backing down while riveting the world with his audacious political play that risks a one-on-one face-off with America the superpower, with the view to achieving the desperate national strategy of becoming a nuclear state.

This study focuses on seeing how Kim Jong-un, as the successor to Kim Jong-il, has applied 'the Military-First', the governing ideology of Kim Jong-il, in consolidating his power in the peculiar militarist state surrounded with an iron curtain and how he is going to use it in the futu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his early days at power, Kim Jong-un was highlighted as a leader who carried Kim Jong-il's 'Military-First' vision. However, when the military armed with Kim Jong-il's 'Military-First Policy' came to be perceived as potentially detrimental to the establishment of Kim Jong-un's exclusive leadership as an aggrandized and abnormal power elite group which was corrupt and dotted with irregularities, the Terror reigned and a bloody purge ensued. After all, the military could no any longer enjoy the 'Military-First' boon from Kim Jong-il's era when it enjoyed precedence over everything else. Still, we see that its importance remains valid as a force that serves to safeguard and build the regime and operates to communize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ational strategy pursued by Kim Jong-un consists in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with 'Party-First', real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a Communist Korean Peninsula with 'Nuclear-Firs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fe with 'Economy-First'. Kim Jong-un seems to have been successful to some extent in stabilizing the regime with internal control which excels that exercised by Kim Jong-un and raising the living standard for the people. Now he does not hesitate to threaten the US territories in North America by succeeding in developing nuclear-tipped missiles. Even though its survival is going to be decided by the US action, it at least appear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united around Kim Jong-un is marching with the aim of fulfilling the regime's goals.

Unlike Kim Jong-il, Kim Jong-un has not reaped any meaningful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s engaged in an audacious game that Kim Jong-il couldn't attempt by seizing a larger piece of the pie by focusing on 'Nuclear-First'. He is displaying his desire to practically become a nuclear state by succeeding in developing nuclear weaponry that threatens the US territories in North America by exploiting South Korea as its wedge. However, as its conflict roils with the US, which sticks to the principle that 'allows no nuk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racing to a touch-and-go crisi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ilitary-First Policy', with which North Korea can provoke the US and South Korea and heighten the threats of war, inevitably serves like a joker in playing cards that Kim Jong-un can effectively take advantage of anytime.

'The attack on the Cheonan' and 'Yeonpeyongdo Shelling' which as the crown prince under Kim Jong-il, Kim Jong-un staged to tighten internal control and highlight his presence, excellently demonstrated his aggressive personality. If he wants to stage a daring aggression exploiting South Korea and eyeing a shift from the worsening relationship with the US, he will probably get the old fond memory of 'Military-First' from his drawers and use it as a wild card for stoking the fire. In a nutshell, Songun ('Military-First') in North Korea has transformed into Yonggun ('Use the Military'), an option that can take any time to defend the regime from its own instability and external threats.

However, in a departure from the era of Kim Jong-il, Songun now comes after Sondang ('Party-First'), Sonhaek ('Nuclear-First'), and Songeyong ('Economy-First'), it mean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to the role and status of the military. History shows that the military through its symbiosis with the dictator serves as the principal contributor to safeguarding a dictatorship but

that when forsaken by the dictator, it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the dictator. Kim Jong-un shouldn't be an exception to this. If the military gets further off the ideological track and its antipathy to the regime deepens, it would pose gravest possible threat to the dictator.

【Keywords】 Byungjin — the parallel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 robust nuclear weapons program, Party-First, Economy-First, Nuclear-First, the Terror, Yonggun, exclusive leadership